

일본군'위안부'문제 현재와 미래

- 어떻게 계승하고 교육해야 하는가 -

일시: 2020.12.8.(화) 09:00~18:00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ZOOM 회의)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목 차

환영사

조태영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기조강연

- 일본군'위안부' 문제 성찰과 과제 9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1세션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발표

-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목소리 21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 일본 중학생에게 가르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31
히라이 미쓰코 (오사카부 공립중학교)

토론

- 김지민 (컬럼비아 대학) 39
- 이경훈 (보라고등학교) 42
-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2세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

발표

- 해외 각 지역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성격과 의미 49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대표)
- 독일베를린의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설치 과정과 의미 53
이광빈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 아시아의 지울 수 없는 흔적: 일본군'위안부' 사진을 통해 기억하다 59
안세홍 (사진작가)

토론

- 소현숙 (한국학중앙연구원) 64
- 신보영 (문화일보) 68
-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71

3세션 일본군'위안부' 문제, 어떻게 기억하고 교육할 것인가

발표

- 피해자 운동을 넘어선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방향 모색 75
양미강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
- 일본군'위안부' 평화 인권 교육의 모델 79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토론

- **길유행** (한겨레신문), **김소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김정인** (춘천교대),
남기정 (서울대),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최이락** (연합뉴스),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신문)

Program

| 시 간 | | 발 표 | |
|--|-------------|------|--|
| 개회식 사회: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09:10~09:15 | 환영사 | 조대영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
| | 09:15~09:35 | 축사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 | 09:40~10:10 | |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 | | 기조연설 |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일본군'위안부' 문제, 성찰과 과제 |
| 1세션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 | |
| 사회: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센터장) | 10:20~10:40 | 발표1 | 알렉시스 더튼 (코네티컷대)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목소리 |
| | 10:40~11:00 | 발표2 | 히라이 미쓰코 (오사카부 공립중학교) 일본 중학생에게 가르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
| | 11:00~11:20 | 발표3 | 정용숙 (중앙대) 독일 언론과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
| | 11:20~12:00 | 토론 | 김지민 (컬럼비아 대학교),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이경훈 (보라고등학교) |
| 12:00~14:00 | | 오찬 | |
| 2세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 | | | |
| 사회: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14:00~14:15 | 발표1 |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대표) 해외 각 지역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성격과 의미 |
| | 14:15~14:30 | 발표2 | 이광빈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독일베를린의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설치 과정과 의미 |
| | 14:30~14:45 | 발표3 | 안세홍 (사진작가) 아시아의 지울 수 없는 흔적: 일본군'위안부' 사진을 통해 기억하다 |
| | 14:45~16:00 | 토론 | 소현숙 (한국학중앙연구원), 신보영 (문화일보),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
| 3세션 일본군'위안부' 문제, 어떻게 기억하고 교육할 것인가 | | | |
| 사회: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센터장) | 16:00~18:00 | 발표1 | 양미강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 피해자 운동을 넘어선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방향 모색 |
| | | 발표2 | 한혜인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 일본군'위안부' 평화 인권 교육의 모델 |
| | | 토론 | 길윤형 (한겨레신문), 김소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김정인 (춘천교육대), 남기정 (서울대), 이신철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 최이락 (연합뉴스),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신문)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조태영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역사문제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주시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축사를 해 주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님도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정진성 교수님을 비롯하여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님, 오사카부 공립중학교의 히라이 미쓰코 선생님,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의 양미강 이사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더든 선생님과 김지민 선생님은 일과가 끝나고 쉬셔야 할 시간이십지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피해자의 역사적 증언 이후 은폐되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1993년 8월 4일 고 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전시하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정치가의 주장에 드러나 있듯이, 일본 정부와 보수 정치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주장이 베를린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 졌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이제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열여섯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1993년 고노 담화, 2007년 미 하원 결의 등은 역사 교육을 통하여 이 문제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교육하고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산발적입니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을 고민하면서 학술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학술회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계승하고 기억할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조태영

기조강연


일본군‘위안부’문제, 성찰과 과제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일본군성노예제: 성찰과 과제

200.12.8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형성과 은폐의 맥락

- ▶ 1. 전쟁 (냉전체제 속에서 계속되는 무력갈등)
- ▶ 2. 젠더 (가부장제)
- ▶ 3. 국가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 독재)
- ▶ 4. 민족 (제국주의/식민주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발견과 확산

- ▶ 1.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발전
- ▶ 2. 피해자 증언
- ▶ 3. 아시아 연대와 세계화. UN. INGO
- ▶ 4. 자료발굴과 연구의 발전



1992 UN



수요시위의 세계화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This is the story of people everyone tried to forget. The matter has been raised before many fora, including those of the United Nations. Much has appeared on the subject in the medi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systematic rape.

Page 3 of 43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ate: GENERAL

ECN.4/Sub.2/1998/13

22 June 1998

D/1998/41 E/1998/18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Fiftieth session
Item 6 of the provisional agenda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ate: GENERAL

E/CN.4/1998/13/Add.1
4 January 1998

Original: ENGLISH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fty-second session
Item 9 (A) of the provisional agenda

FURTHER PROMOTION AND ENCOURAGE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PROGRAMME AND METHODS OF WORK OF THE COMMISS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WAYS AND MEANS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IMPROVING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ddendu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Ms. Radhika Coomaraswamy,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4/45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한계와 도전

구조적 배경

- ▶ 1. 무력갈등과 젠더 폭력
- ▶ 2. 국제사회의 패권주의
- ▶ 3. 아시아의 정의 지체



과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미래

- ▶ 1. 자료의 종합
 - ▶ 2. 자료발굴과 연구
 - ▶ 3. 교육
 - ▶ 4. 기억
 - ▶ 5. 평화와 탈식민화를 위한 기여
- ▶ 이 모든 과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
(재단 또는 센터, 정부 또는 민관협력체)

과제1 : 자료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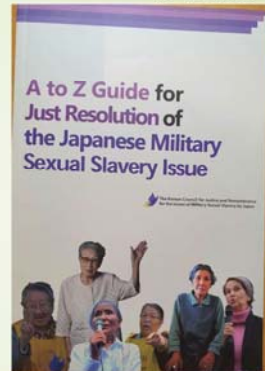
- ▶ 1. 기존의 자료 정리
- ▶ 2. 흩어져 있는 자료들의 연결. 체계화
(동북아역사재단, 서울기록원, 국가기록원, 여가부, 정의연, 희움 등의 자료를 연결 목록화하고, 일본, 미국, 호주 등 자료가 있는 곳과 연결. 누구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 ▶ 3. 아카이빙
(가능한 자료 아카이빙하고, 그밖에 링크 가능하도록)

과제 2: 자료발굴과 연구

- ▶ 1. 여전히 남아 있는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
- ▶ 2.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 진전. 협력과 토론
- ▶ 3. 자료 및 연구물의 영문화
- ▶ 4. 연구의 국제적 활성화



정의연 발간



서울대연구팀 pdf

Records Memories

: Stories of "Comfort Women,"
Untold Words

| SEOUL_ARCH_VLS_ID | REFERENCE_CO_ID | FORMAL_TITLE | OTHER_TITLE | DATE | START_DATE | END_DATE | DATE_NOTE | INCLUDE | SCOPE/LANG/CONTEN |
|-------------------|-----------------|---------------|--|------|------------|----------|-----------|---------|-----------------------------|
| 고유번호 | 관리번호 | 본기록 | 분기록 | 날짜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날짜 추가 | 특허 기술단위 | 설명 |
| | | 홍콩에서 탈출한 | Report by Mr. Odell, escaped Hong Kong 3/May/42 | | 19420503 | 19420503 | | | 이 문서는 일본군의 홍콩을 함락한 |
| | | 영국군 제17인도 | War Diary of HQ 17th Ind Div, Volume VI | | 19450700 | 19450700 | | | 이 문서는 1945년 7월 마지막 인도 |
| | | 110 인도의인 전쟁 | 110 Indian POW Cage War Diary July to Dec. 1945. | | 19450000 | 19450000 | | | 이 문서는 1945년 7월 말과 12월 초 |
| | | 황후 사관관전 일 | HQ. 8th Commandant Bangkok War Diary | | 19460500 | 19460500 | | | 이 문서는 태국 북쪽에 위치한 부다 |
| | | 110 인도인 전쟁 | 110 Indian POW Cage War Diary Jan. to May. 1946. | | 19460000 | 19460000 | | | 이 문서는 1945년 12월 말과 1946년 5월 |
| | | H.M.S. "NESS" | At sea off West Sumatran Coast | | 19451130 | 19451130 | | | 이 문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근 |
| | | 동남아시아연락 | SEATIC, Intelligence Bulletin No.177 | | 19450626 | 19450626 | | | 이 문서는 동남아시아연락본부의 |
| | | | SMC, 4819 | | | | | | 이 문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연 |
| | | | SMC, 7642 | | | | | | 이 문서는 영국군 제6인도사단어 |
| | | 410031/Q | MOV 610 | | 19460507 | 19460507 | | | 이 문서는 인도 사할라부기 동남아시아 |
| | | 제군사본부 방대 | NOK, Bangkok 161007 May | | 19450516 | 19450516 | | | 이 문서는 방콕에서 영국군고사 |
| | | 일본군의 전담 | Japanese Medical Service in the Field, No.9 | | 19450500 | 19450500 | | | 이 문서는 1945년 5월 영국군 인도 |
| | | 일본군 장교 개인 | Personal war diary of Japanese officer | | 19420706 | 19420706 | | | 이 문서는 일본군 장교의 일기 |
| | | 수아라바에, 자바, | Sourabaya, Java: treatment of POWs and European and Dutch | | 19460122 | 19460122 | | | 이 문서는 할라한티 전쟁범죄조사 |
| | | 성 남부 조사보고 | Investigations in Southern Shan States | | 19460600 | 19460600 | | | 이 문서는 제2차 동북아 위대한 전쟁 |
| | | | Report on enforced prostitution in Western Borneo, N.E.I. during | | 19460705 | 19460705 | | | 이 문서는 보르네오, 서부 말라야 |



영국 NARA




시노하라 재판

과제 3: 교육

- 중고교 교과서
- 학생 스스로, 참여
- 대학 강의 개설 (성공회대학)
- 수요시위를 대중교육의 장으로
- 전시, 박물관을 통한 대중교육

한국어

학교 100곳에 '작은 소녀상', 10대 소녀들이 해냈다



2017년 10월 20일, 10대 소녀들이 학교 100곳에 '작은 소녀상'을 세웠다. 이 소녀상들은 소녀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징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과제 4: 기억

- ▶ 1. 기념비
- ▶ 2. 전시
- ▶ 3. 영화, 소설, 연극 등
- ▶ 4. 유네스코 등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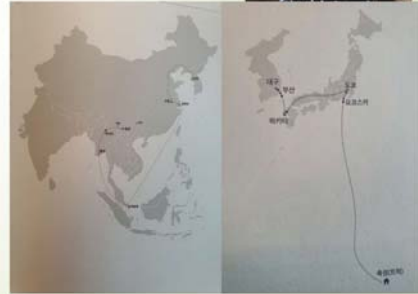
베를린



샌프란시스코

과제 5: 평화와 탈식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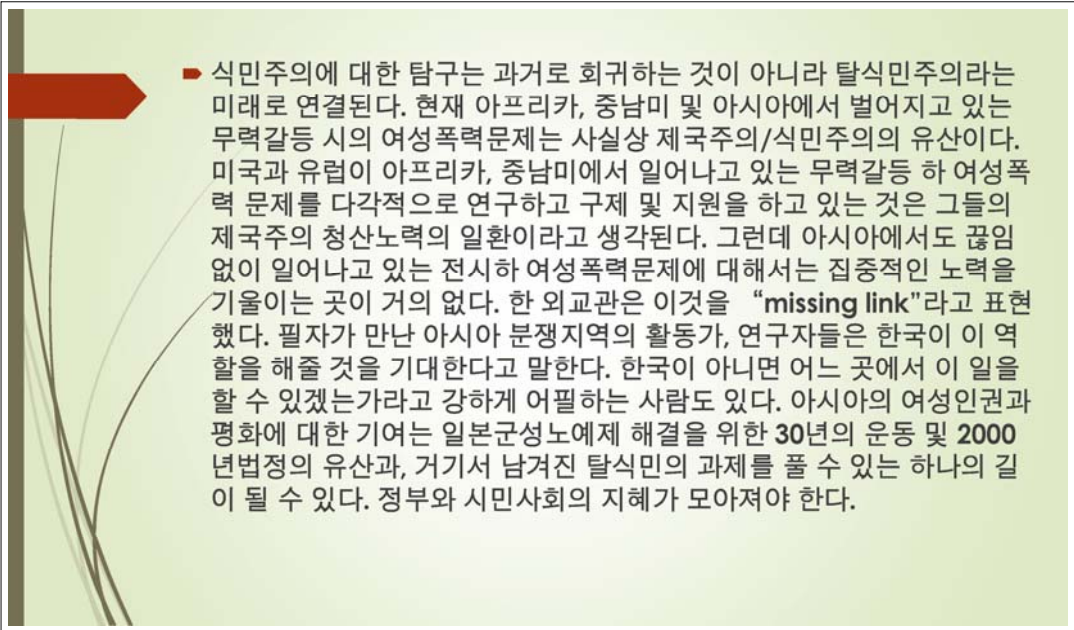
- 1. 한일관계의 극복
- 2. 보편적 가치: 여성인권과 평화
그러나, 다른 한편
- 3. 일본군성노예제의 아시아성
(식민지, 반식민지, 점령지):
탈식민주의 필요



결론

- 1. 일본군성노예제 연구와 운동의 발전 지속, 동시에
- 2. 아시아의 전시하 여성피해문제에 대한 기여

이 두 방향이 함께 가야,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정의를 세우면서,
탈식민지화 및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 
- 식민주의에 대한 탐구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탈식민주의라는 미래로 연결된다. 현재 아프리카, 중남미 및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갈등 시의 여성폭력문제는 사실상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유산이다.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갈등 하 여성폭력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구제 및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제국주의 청산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도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시하 여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거의 없다. 한 외교관은 이것을 “missing link”라고 표현했다. 필자가 만난 아시아 분쟁지역의 활동가, 연구자들은 한국이 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국이 아니면 어느 곳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도 있다. 아시아의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기여는 일본군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 및 2000년법정의 유산과, 거기서 남겨진 탈식민의 과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1 세션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목소리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발
표

일본 중학생에게 가르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히라이 미쓰코 (오사카부 공립중학교)

독일 언론과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

정용숙 (중앙대)

토
론

김지민 (컬럼비아 대학)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이경훈 (보라고등학교)

A Transnational Understanding of Halmoni History

Alexis Dudden(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term, “comfort women,” refers to the system of militarized sexual slavery perpetr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1930s and 1940s in areas under its colonial and wartime command. Beginning with Japan proper and extending to Korea, China, Taiwan, Southeast Asia, and numerous Pacific Islands, the system’s estimated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of victims and survivors are euphemized along with the structural history involved together as “the comfort women.”

At best, the expression is incorrect and hurtful. At worst, it denies what happened: to begin, there was no “comfort” for those trapped against their will and raped up to 40 times per day over the course of years at a time in building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state for its soldiers and civilian employees working for the military throughout the Japanese empire. As Eika Tai explains, “According to military records, the purposes of the creation of comfort stations were to prevent soldiers from committing rape in occupied areas and contracting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owever, Yoshimi (Yoshiaki, a leading historian on the issue), found that soldiers never stopped raping local women.”¹⁾ Additionally, there are recorded accounts throughout Southeast Asia of young boys and men ensnared into a historical system that numerous international lawyers, judges, human rights activists, and victims’ advocates have determined as a state-sponsored crime against humanity.

1) Eika Tai, *Comfort Women Activism: Critical Voices from the Perpetrator State*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20).

On the one hand, the more we learn about the system the more it seems we can never make sense of it. In a word, even thinking about the fundamental aspects and context of this history for those of us who have not endured such terror makes it difficult to explain. First, there are the details of the violence that the victims endured within the system. Then, there are details of the difficulties that survivors faced once the structure of the system collapsed with Japan's defeat in 1945 which amounts to the double victimization that so many survivors endured throughout their lives.

On the other hand, as we study, analyze, and describe what might best now be collectively called "*halmoni* history" as the criminal act it was we should take as a baseline the need to confront and teach the meaning of the words involved—as difficult as they are.²⁾ Most important is to learn ways to explain that rape is always and forever an act of violence: it is not sex. In some of my classes, for example, I ask students to begin studying this history by examining the meaning of "rape" i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and to grapple with the verb—"to rape"—to understand that in all of this's verbs meanings it is always an act of force and associated with violence and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to whom it is happening. This is true, too, in Korean, Japanese, Chinese, French, German, and so on, and it is helpful for those learning about "*halmoni* history" for the first time to confront up front the violence of what happened to those trapped in system. We know this because for decades the deniers and appeasers of "*halmoni* history" have tried to distract from this basic element involved by debating whether or not the victims involved were

2) I agree strongly with filmmaker to Cho Jung-rae who made the bold choice in his 2016 *Spirits' Homecoming* (귀향) to focus on the youth of the victims when the history took place in the 1930s and 40s. He explained to me and many others that the term "*halmoni*" made some people simply think of old women. I agree with his decision for his film, yet for the purposes of studying this history now and moving forward, I believe it helps collectivize the experience of survivors today—and helps them share their experience with others around the world who have more recently suffered.

“coerced” or “forcibly coerced” into the system. International lawyers have strongly disputed the denialists’ line of argument by demonstrating that the legal notion of “coercion” incorporates “deception” and “trickery” in addition to “force.” If, for example (as many cases demonstrate), a 16-year old girl from what we now would call South Korea found herself sold by a local official or family member into the Japanese military the law defines that as “coercion” regardless of the local official or family member’s ethnicity.³⁾ Subsequently, when this young woman would find herself in some far-flung outpost of the Japanese empire such as Saipan or Rabaul or even within Japan proper, she was housed against her will at what international law now calls a “rape camp” — regardless of the term used at the time.

Survivors make clear that this is how they would lik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to learn about what happened to them on an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 in order to end the ongoing practice of targeted sexual violence during wartime. For this reason, above all, survivor groups and their supporters work together today with survivors of ongoing systems of wartime targeted sexual violence in areas such as Nigeria, Iraq, and other places where similar histories are occurring. Thus, it is essential to listen to survivors teach us how their history should be taught.

(IMAGE 1: MAP OF STATIONS HERE)

In this regard, it is useful to consider the work of the Senegalese philosopher, Achille Mbembe, in order to emphasize the violence inherent to “*halmoni* history.” In his seminal study of modern society called, “Necropolitic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teractions operate through what he describes as a system by this name—

3) This, for example, is what makes the work of Pak Yuha so wrong-headed, and different from others who interrogate the complexities of the colonial era such as C. Sarah Soh who have pointed out ethnic connections but do not downplay the violence of the history.

“necropolitics” (the politics of death)— in which those in charge “define who matters and who does not, who is *disposable* and who is not.”⁴)

Mbembe’s path-breaking work opens with a Lamba proverb (present-day Zambia) that reads as follows:

Wa syo' lukasa pebwe
Umwime wa pita
[He left his footprint on the stone
He himself passed on]

More than anything, the proverb (and Mbembe’s explication) hits at the heart of the problem involving historical evidence when an atrocity has occurred—genocide, slavery, massacres, and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Traditionally-valued historical evidence becomes yet another aspect of “*halmoni* history” that deniers and detractors latch onto. Never mind that at this stage of our collective research and understanding quite a lot of governmental documentation has been unearthed and published in multiple languages—such evidence remains the “gold standard” for historical research—because the deniers continue to explain it away in ways similar to what Donald Trump’s supporters call “fake news” (that is, even in the face of factual evidence the people determined to exist in an alternate reality describe the evidence as “fake”).⁵)

Thus, in addition to government documents concerning “*halmoni* history” (again, of which there are many), it is important to champion what human rights advocates and lawyers have long established as credible evidence together with oral testimony. Such material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ings such as songs remembered from time

4) Achille Mbembe,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15, no. 1 (2003): 27.

5)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and one of the most politically-connected of these groups in Japan is the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
<http://www.sdh-fact.com/mission-statement/>

spent trapped in the rape camps as well as paintings done during art therapy classes and so on. Above all, such materiality connects survivors' stories to their shared history in the past and connects that past to the present.

(IMAGE 2: IYANG APAY PAINTING THE OUTLINE OF HER FOOT)

For example, the photograph here shows Iyang Apay (1929-2013) taking part in an art therapy class in Taipei nearly ten years ago towards the end of her life.⁶⁾ Apay, an indigenous Taiwanese woman, was 17 when a police officer came to her family's front door and conscripted her to work for the local Japanese military camp, explaining that she would do laundry and prepare meals for the soldiers. Upon arrival at the camp, she was raped and forced into sexual servitude for the duration of the war. In her case—like many others throughout the Japanese empire—she did not learn that Japan had lost the war for nearly a year after the surrender: the troops stationed at Iuh where Apay was enslaved did not tell the news to the locals and continued to rape the victims until they were deported back to Japan. Like tens of thousands of other survivors, Iyang Apay endured a different but equally difficult life following her ordeal, including multiple marriages and divorces to men who learned her history and described her as an “abomination” for things over which she had no control or choice—regardless of how deniers portray it. If nothing else, this image of Apay tracing the outline of her foot helps teach into the future the meaning and power of the Lamba proverb mentioned in Achille Mbembe's essay: in 2013, Iyang Apay “passed on,” yet her determination to survive demonstrated her determination not to be thrown away and not to allow her suffering—her history—to be erased.

6) AMA Museum, *The Brave Ones and Their Rainbows: Life Paintings by Taiwanese 'Comfort Women' Survivors and Submissions 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Taipei, 2017)

For survivors as well as the untold numbers of victims who died within the horrible system of militarized sexual servitude that ensnared them against their will it is imperative that we continue to work to make their shared history understood in ways that dignify the lives lost within the system and the lived of those who survived it.

‘할머니’ 역사의 초국가적 이해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교)

‘위안부’라는 용어는 1930-1940년대에 일본 정부가 식민통치 및 전시체제하에서 자행한 군대 성 노예 제도를 말한다. 일본 본토에서 시작된 위안부 제도는 한국,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로 확대되었고,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추정되는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은 이 제도에 결부된 구조적 문화와 함께 ‘위안부’라는 완곡한 용어로 묘사되고 있다.

‘위안부’라는 표현은 좋게 말하면 부정확하고 상처를 주는 용어이며, 나쁘게 말하면 벌어진 상황을 부인하는 용어다. 일단 일본 군인과 군속들을 위해 일본 정부가 일본제국 전역에 설치한 시설에 타의에 의해 갇힌 상태로 수년에 걸쳐 하루에 많게는 40 차례씩 강간당한 이들에게 ‘위안’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에이카 타이 (Eika Tai)는, “군대의 기록에 따르면 군인들이 점령지역에서 강간을 저질러 성병에 감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나, 요시미 (요시아키, 이 문제의 선구적 역사학자)는 군인들이 현지 여성들까지 계속해서 강간했음을 발견했다.¹⁾”고 설명한다. 또한 수많은 국제 변호사, 판사, 인권 활동가,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한 이 제도에 어린 소년들과 남성들이 걸려들었다는 기록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말해, 같은 공포를 견뎌본 경험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역사의 근본적인 측면과 맥락에 대해 생각해 보는 단계에서부터 설명이 어려워진다. 일단은 위안부 제도에서 피해자들이 견뎌야 했던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이 제도의 구조가 무너진 후에 생존자들이 당면한 고난, 즉 수많은 생존자들이 평생에 걸쳐 견뎌야 했던 두 번의 피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 역사’라고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최선인 듯한 이러한 범죄행위를 연구, 분석 및 서술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직시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²⁾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

1) 에이카 타이 (Eika Tai), 「위안부 활동주의: 가해국에서 들려오는 비판의 목소리 (Comfort Women Activism: Critical Voices from the Perpetrator State)」 (홍콩: 홍콩대학교 출판부, 2020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20]).

2) 2016년작 <귀향>에서 1930-1940년대 당시 피해자들의 젊음에 초점을 두는 과감한 선택을 한 조정래 감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조정래 감독은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에게 ‘할머니’라는 단어가 일부

분은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강간은 성관계가 아닌 폭력행위임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필자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 옥스포드 영영사전에서 ‘강간’이라는 단어와 ‘강간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찾아 보게 함으로써 사전에서 이 동사가 빠짐없이 힘에 의한, 폭력이 결부되는 행위이자 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됨을 파악하게 한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어떠한 언어의 사전에서든 같은 정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할머니 역사’에 대해 처음으로 학습하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정면으로 마주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업이다. 수십 년간 ‘할머니 역사’를 부인하고 유희론을 펼친 이들이 피해자들이 ‘강제로’ 또는 ‘물리력을 통해 강제로’ 위안부 제도에 편입되었는가의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며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주의를 분산시켰기에 앞서 말한 작업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변호사들은 ‘강제’라는 법적 개념에 ‘물리력’ 외에도 ‘기만’과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며 부인론자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례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16세 소녀가 공무원이나 가족에 의해 일본군에 팔려갔다면 공무원이나 가족의 국적(민족)에 관계 없이 법에서는 이것을 ‘강제’된 상황으로 규정할 것이다.³⁾ 이러한 소녀가 사이판이나 라바울과 같이 일본제국의 멀리 떨어진 전초기지나 일본 본토로 옮겨져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시 사용한 용어가 무엇이든) 현재 국제법에서 ‘강간소 (rape camp)’라고 부르는 공간에 갇혔던 것이다.

생존자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을 종식시키고자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생존자 집단과 지지자들은 나이지리아, 이라크, 그리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기타 지역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표적화된 전시 성폭력 체제의 생존자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생존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1: 위안소 지도)

세네갈 출신의 철학자인 아실 음벰베 (Achille Mbembe)의 글을 살펴보면 ‘할머니 역사’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사회에 관한 연구를 담은 ‘죽음의 정치 (Necropolitics)’에 따르면 음벰베가 ‘죽음의 정치’라고 부르는 체제를 통해 정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늙은 여성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에서 조정래 감독이 내린 결정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위안부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생존자들의 경험을 집산하고 보다 최근에 이러한 제도로 고통 받은 전 세계 피해자들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민족적 연계는 지적하되 제도의 폭력성을 가볍게 치부하지는 않은 소정희 (C. Sarah Soh) 등 식민시대의 복잡성을 분석한 다른 연구자와 달리 박유하의 저서가 너무나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시이다.

사회 및 경제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중요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버려도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결정한다.⁴⁾

음벰베의 ‘죽음의 정치’는 다음과 같은 람바 (오늘날의 잠비아)의 속담으로 시작된다.

Wa syo' lukasa pebwe Umwime wa pita

[그는 자신이 죽어간 바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이 속담 (그리고 음벰베의 해설)은 무엇보다도 집단학살, 노예제도, 대학살 및 기타 반인도적 범죄 등의 잔혹행위가 발생했을 때 역사적 증거에 수반되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린다. 전통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던 역사적 증거가 위안부에 대해 부인하고 폄하하는 이들이 집착하는 ‘할머니 역사’의 또 다른 측면이 된다. 종합적 연구와 이해를 위해 상당량의 정부 측 기록이 발견되어 여러 언어로 간행되어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역사연구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된다. 부인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설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가상의 현실에 살기로 마음 먹은 이들은 그러한 증거가 ‘가짜’라고 말한다).⁵⁾

따라서 ‘할머니 역사’에 관한 (상당한 규모의) 정부 문헌 외에도 인권 옹호자들과 변호사들이 오랫동안 구두증언과 함께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인정해온 자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에는 강간소에서 구금되어 지내던 시절부터 기억해온 노래, 미술치료 수업에서 그린 그림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료가 지닌 실체성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이들이 과거에 공유했던 역사와 연결하고, 그러한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이미지 2: 발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양 아파이)

예컨대 이 사진은 거의 10년 전 인생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던 이양 아파이 (Iyang Apay) (1929-2013)가 타이페이에서 미술치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⁶⁾ 대만 원주민인 아파이가 17살이던 때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의 현관문 앞에 경찰이 찾아와 군대에서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군 주둔지로 아파이를 징집해 갔다. 아파이는 군영에 도착한 후 전쟁기간 내내 강간당하며 성 노예로 살아가야 했다. 일본제국 전역의 수많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아파이는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1년 가까이 일본의 패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아파이가 성 노예로 생활한 이부 (Ibuh)에 주둔하던 군인들은 현지 주민

4) 아실 음벰베 (Achille Mbembe), “죽음의 정치 (Necropolitics),” 『대중문화 (Public Culture)』, 15, no. 1 (2003): 27.

5)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이와 같은 집단 중 정치적 연계가 가장 강력한 조직은 ‘역사적 사실 보급협회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다 (<http://www.sdh-fact.com/mission-statement/>).

6) AMA 박물관 (AMA Museum), 『용감한 사람들과 그들의 무지개: 대만 ‘위안부’ 생존자들의 그림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출작품 (The Brave Ones and Their Rainbows: Life Paintings by Taiwanese ‘Comfort Women’ Survivors and Submissions 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타이페이, 2017 [Taipei, 2017]).

들에게 패전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일본으로 추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강간했다. 그 후에도 다른 수만 명의 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양 아파이는 (부인론자들이 어떻게 묘사하든) 자신이 통제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던 과거를 알고 그녀를 ‘혐오’하게 된 남성들과 몇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성 노예 생활과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이 힘겨운 삶을 견뎌야 했다. 자신의 발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파이의 사진은 아설 음벰베의 글에 등장하는 람바 속담이 지닌 의미와 힘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2013년에 이양 아파이는 ‘세상을 떠났다 (passed on)’. 하지만 그가 보인 생존에 대한 의지는 버려지지 않으려는, 자신의 고통이 (즉, 역사가) 지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결단을 보여준다.

스스로의 의지에 반하여 종속된 끔찍한 군대 성 노예제에서 죽어간, 그 숫자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앗아간 생명과 살아남은 이들이 살아온 삶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 공동의 역사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慰安婦」問題を中学生にどう教えるか

平井美津子(大阪府公立中学校社会)

1. 植民地支配から見る「慰安婦」授業

1991年の金学順の告白は多くの人々にそれまであまり知られてこなかった戦争による性暴力の悲惨さを目の当たりにさせた。そしてその話を聞いた多くの人々が同情と共感の思いを持った。ところが今は「慰安婦」という言葉に、「うそつき」「強制じゃない」という反応が日本国内で飛び交うありさまだ。日本の政府がこの問題を否定的に扱い、歴史修正主義者が煽ったことは大きいですが、植民地支配責任について考えてこなかったことも大きな原因と言えよう。植民地支配を正当化し、植民地にしたことで朝鮮を発展させたという主張を繰り返しているのがこれまでの日本政府の姿勢だ。「慰安婦」として朝鮮半島各地から戦場へ連れて行かれた少女たちの背景には植民地支配がある。そこを見つめることなしに、「慰安婦」の問題を理解することはできない。

「慰安婦」の連行のされ方は、朝鮮と侵略地の中国や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などとは違う。朝鮮半島の「慰安婦」の多くは、人さらいのように連行された例よりも、甘言によって騙されて連れていかれたほうが多い。それは植民地支配下だったからこそ起きた犯罪と言える。植民地支配責任が欠落したまま、日韓基本条約や日韓請求権協定が結ばれたことが、現在の状況を生んでいる。植民地支配の実態とは何かを問うことなしに、現在における徴用工や「慰安婦」問題の真実を読み取ることはできない。

2020年の「慰安婦」授業は、この観点から行った。

まず、韓国併合と3・1独立運動を各1時間配当で行った。韓国併合では、併合に至る経緯と朝鮮農民からの土地取り上げの実態、貧困によって日本・満州への移住を余儀なくされた朝鮮の人々を扱った。3.1独立運動では運動の背景として同化政策によって朝鮮人の誇りを奪っていったこと、蔑視にさらされ、大日本帝国憲法をはじめとする日本の法律が適用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を取り上げ、ユ・ガンスンの活動から3.1独立運動を紹介し、厳しい弾圧と、日本の敗戦に至るまで各地で独立運動が続いたことを取り上げた。

アジア太平洋戦争では、植民地と占領地として1時間を使い、強制動員や強制労働を取り上げ、徴用工や「慰安婦」を紹介した。

戦後の日韓基本条約のところでは、2時間をとって授業を構成した。1時間目は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の内容と日韓の主張の違いを知り、徴用工の問題を扱い、2時間目にカン・ドッキョンの生涯から「慰安婦」について考え、最後に感想を書くという形で行った。

1時間目の始まりは、1965年に日韓基本条約締結まで13年もかかったのはなぜかを考えた。極東国際軍事裁判においても、植民地への加害責任は問われず、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においても、大韓民国も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も参加できなかったことを説明。日韓会談での日本側首席代表の久保田貫一郎外務官僚の「例えばはげ山が緑の山に変わった。鉄道が敷かれた。港湾が築かれた」など「よかった面」という発言を紹介し、この発言に韓国側が反発した理由を考えた。

日韓双方の韓国併合条約の捉え方の違い、韓国政府は植民地支配の賠償を求めているが、日本政府が一貫して韓国への植民地支配責任を認めていないために賠償という名前を使おうとしなかったこと、最終的に経済協力のみで賠償はなし、請求権は相互に放棄するという内容の条約が結ばれてしまったことを話し、個人請求権までが消滅したわけでない日韓がともに理解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側は個人請求権の行使そのものを否定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説明し、徴用工たちの実態を紹介した。

2時間目は、カン・ドッキョンの生涯を追いながら、挺身隊の募集に応じた理由の背景が、植民地下における朝鮮の人々の貧困実態から浮かび上がる。Wam (<https://wam-peace.org/ianjo/map/>) が作成した慰安所マップを使って、各地の慰安所の写真や場所を地図で確認することで、日本軍が侵攻した場所のほとんどに慰安所があった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慰安婦」にも日本人、朝鮮人、中国人で利用料金に差がつけられていたこと、15歳という若い女性が連れていかれたことを民族差別や性病の問題と関連させて説明、慰安所を作った主体や利用した兵士、カン・ドッキョンが告白した思いについて考えさせた。

最後に諸外国の戦後補償や植民地問題との向き合い方、ダーバン宣言、戦争犯罪の問題をモニュメントにして残すドイツの取り組みを紹介し、ワイツゼッカーの「後になって過去を変えたり、起こらなかったことにするわけにはまいりません。しかし過去に目を閉ざす者は結局のところ現在にも盲目となります。非人間的な行為を心に刻もうとしない者は、またそうした危険に陥りやすいのです。」¹⁾という言葉を紹介して終わった。

生徒の感想の半数は植民地支配に言及し、植民地支配の中で「慰安婦」をはじめとする被害が起きたという認識に立ち、植民地支配に関して日本に大きな責任があると考え、個人への賠償の実現を望む声だった。植民地にされてからの朝鮮人の貧困が、戦争中に日本に協力を余儀なくさせられていった実態をとらえて考えるものや、「慰安婦」、徴用工のそれぞれの体験に具体的に言及して責任を問う感想が多くあった。

また、被害者に寄り添う感想や「自分だったなら」と考えるもの、「悲しすぎる、なぜこんなことが起きたのか」「どれほどつらかっただろうか」といった共感の思いを寄せ、そこからなぜこんなことが起きてしまったのかと植民地支配や戦争の問題にさかのぼって考えるものもあった。植民地化の貧しさから工場に働きに行ったカン・ドッキョンが、そこから

1) 1985年5月8日、西ドイツのヴァイツゼッカー大統領が、ドイツの敗戦40周年にあたって連邦議会で行った演説の一説。

必死で逃げた後に待っていたものは、想像を絶する性暴力だった。当時の「慰安婦」や徴用工にさせられた人の具体的な体験を知ること、生徒自身がその体験の中に自分を置き、自らのものとして考えたと言えよう。

この授業を受けた生徒たちの中に芽生えた主体性こそが、二度とそういった被害（加害）を生み出さないためにはどうしたらいいのか、起きてしまった被害（加害）についてどう解決していけばいいのかを考える力を生みだすきっかけ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一方、ごく一部とは言うものの、「慰安婦問題を外交カードとして利用する韓国にも非がある。毅然とした態度を韓国に取るべき」「日本の植民地支配は今の視点からは悪だが、当時は、やらなければやられる世界だった。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に解決されたもので、現在の問題は韓国国内で解決すべきだ」といった、昨今の報道や日本の加害の問題を矮小化するようなネット情報や本などからの情報を得て、書いているような感想も見受けられた。

植民地支配の責任を考えた生徒たちは、植民地支配という当時の行為を問題にしながらも、その責任の果たし方の一つとして自分たちに引きつけ、「過去の出来事を日本人が知ることが大切」「私たち学生も知る必要があると思う。そしてこれからどうしていくべきか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う」「この慰安婦問題を忘れることなく、同じ過ち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していくことが、私たちの未来の平和につながる」などと感想を書いた。また、現代における歴史を否定する声やヘイトスピーチなどに触れ、朝鮮の人々への差別を考えるものもあった。

2 「慰安婦」問題を学ぶ意味

2017年にアメリカから沸き起こった“#Me Too”運動は韓国で大きく広がっている。韓国の女性たちが置かれた状況を克明につづった『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はベストセラーになり、映画化され、セクハラやパワハラに対する目は厳しくなった。その根っこに金学順のカミングアウトがあると考えられる。女性への性暴力について学び、女性の地位の問題を考えていくことは、日本と韓国で互いの共感からの連帯が生まれてくる下地は十分あるのだ。「慰安婦」問題を学ぶことは、現代的な課題にも直接結びつくことと言えるだろう。

慰安婦にされた女性が負ったものは数知れない。その当時の精神的・肉体的被害はもちろんだが、戦争が終わった後も、その傷は癒えていない。それどころか、元「慰安婦」の証言を否定することを、加害国を代表する閣僚などの政治家が発言し続けることは元「慰安婦」にとって、戦時中に受けた直接的被害以上に大きな被害を与えていることになるのだ。金学順の最初の告白から30年たとうとする今なお、「慰安婦」にされた人々の被害は続いている。加害行為をしている人間はその時代によって変わっても、「慰安婦」だった被害

者は変わらずにずっと被害を受け続けている。このままでは彼女たちは死ぬまで、そして死んでも被害を受け続け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一人の人間として、この女性たちへの加害をもう止めさなければならぬと切実に考える。

「慰安婦」問題は過去の歴史事象ではなく、現代的な課題を持つ事柄である。この問題にどう向き合うかということに、社会としての成熟度が問われる。だからこそ、「慰安婦」問題について、事実、背景、この問題をめぐる経緯、日本政府の対応、韓国との軋轢、被害者の願いなどを理性的で科学的に見ていくことこそが、本当の意味での未来の日韓両国の平和につな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それを学校で教えていくのは、歴史教育に携わっている教師である。教師自身がどのように現実を見つめ、現実に生き、そこから過去をどう見ていくのかが大きく問われている。勇気を出して声を上げた元「慰安婦」の方々に学び、歴史学に立脚した教育実践を作り出していかなければと思う。

‘위안부’ 문제를 중학생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히라이 미쓰코(平井美津子, 오사카부 공립중학교)

1. 식민지 지배로 보는 ‘위안부’ 수업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던 전쟁에 의한 성폭력의 처참함을 목도한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을 들은 많은 이들이 동정과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위안부’라는 단어에 ‘거짓말’ ‘강요는 없었다’라는 반응이 난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루고, 역사수정주의자가 부추긴 것도 큰 원인이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성찰하지 못한 부분도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지로 편입함으로써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위안부’로서 한반도 각지에서 전쟁터로 끌려간 소녀들의 배경에는 식민지 지배가 존재한다. 그 점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위안부’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터이다.

‘위안부’의 연행 방법은 조선과 침략지인 중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달랐다. 한반도의 ‘위안부’는 태반이 유괴처럼 끌려간 예보다 감언이설에 속아 끌려간 사례 쪽이 많다. 이 또한 식민지 지배가 있었기에 일어난 범죄라 하겠다. 식민지 지배 책임이 빠진 채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것은 작금의 상황을 낳고 말았다. 식민지 지배의 실체란 무엇인가를 추궁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포착할 수 없다.

2020년의 ‘위안부’ 수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한일병합과 3·1운동에 각 1시간씩 할애해 수업을 진행했다. 한일병합에서는 병합에 이르는 경위와 조선 농민에 대한 토지 약탈 실태, 빈곤으로 인해 일본·만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던 조선인들을 다루었다. 3·1운동에서는 운동의 배경으로 동화정책으로 조선인의 자긍심을 빼앗았고, 멸시했으며, 대일본제국헌법을 비롯한 일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고, 유관순의 활동을 통해 3·1운동을 소개하고, 가혹한 탄압과 일본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는 식민지와 점령지 관련 내용에 1시간을 할애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설명하고 징용공과 ‘위안부’를 소개했다.

전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는 2시간을 할애해 수업을 짰다. 1시간째에서는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과 한일의 상이한 주장을 배우고 징용공 문제를 다루었고, 2시간째에는 강덕경의 생애를 통해 ‘위안부’에 대해 고민하고 마지막에 감상을 적는 식으로 진행했다.

1시간째에는 우선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체결까지 13년이나 걸린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식민지에 대한 가해 책임은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 때도 대한민국이나 북한은 참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 한일회담 당시,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 貫一郎) 외무관료의 “예를 들면 민둥산을 푸르게 만들었고 철도를 깔았고 항만을 건설했다” 등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발언을 소개하고 이 발언에 한국 측이 반발한 까닭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일 양국의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온도 차, 한국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배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려 해, 결국에는 경제협력으로만 마무리 짓고 배상 없이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일 양국이 서로 이해했음에도 일본 정부 측은 개인청구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해 버렸다고 설명하고, 징용공들의 실태를 소개했다.

2시간째에는 강덕경의 생애를 쫓아가면서 정신대 모집에 응한 배경을 통해 식민지 하 조선인들의 빈곤 실태를 조명했다. Wam(<https://wam-peace.org/ianjo/map/>)이 작성한 위안부 지도를 활용해 각지에 있던 위안소의 사진과 장소를 지도로 확인함으로써 일본군이 침공한 지역에는 거의 예외 없이 위안소가 설치되었음을 배웠다. 그리고 ‘위안부’들도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달랐고, 열다섯의 어린 소녀가 끌려간 사실을 민족차별이나 성병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 위안소를 설치한 주체와 이용한 병사, 강덕경이 고백에 이른 심경을 고민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각국의 전후보상과 식민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더반 선언(Durban Declaration), 전쟁범죄 문제를 모뉴먼트로 제작해 남기는 독일의 활동을 소개하고,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독일 전 대통령의 “과거는 나중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인간적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시금 그러한 위험성에 감염될 소지가 많은 사람입니다”¹⁾라는 연설 일부분을 소개하고 마무리 지었다.

학생 중 절반은 식민지 지배를 언급하고, 식민지 지배 속에서 ‘위안부’를 비롯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식에 서서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는 일본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개인 배상의 실현을 바라는 감상을 적고 있다. 식민지로 편입된 이후 조선인이 직면한 가난이 전

1) 1985년 5월 8일, 서독 바이체커 대통령이 독일 패전 40주년에 즈음하여 연방의회에서 가진 연설의 한 부분.

쟁 중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던 현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고, ‘위안부’, 징용공 각각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책임을 묻는 감상도 많았다.

또 피해자에게 동조하는 감상이나 ‘나였다면’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너무 슬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처럼 공감하고 그를 토대로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야만 했는가라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다. 식민지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고자 공장으로 일하러 간 강덕경이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뒤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폭력이었다. 당시의 ‘위안부’나 징용공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구체적인 체험을 이해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그 체험에 자신을 대입하고 자신의 것으로 고민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서 짙은 주체성이야말로 두 번 다시 그러한 피해(가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미 일어나 버린 피해(가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를 고민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위안부 문제를 외교 카드로 사용하는 한국에도 문제가 있다. 의연한 태도로 한국에 대처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현 시점에서 보자면 악이나, 당시는 먼저 나서지 않으면 먹히는 세계였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지금의 문제는 한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와 같은 작금의 보도나 일본의 가해 문제를 축소하는 듯한 인터넷 정보, 책 등에서 정보를 얻어 쓴 듯한 감상도 볼 수 있었다.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고민한 학생들은 식민지 지배라는 당시의 행위를 문제시하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신에게 대입해 “과거의 사건을 일본인이 아는 것이 중요” “우리 학생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고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미래의 평화로 이어진다” 등의 감상을 적고 있다. 또 현대의 역사를 부정하는 목소리나 헤이트 스피치 등을 들며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성찰하는 학생도 있었다.

2. ‘위안부’ 문제를 배우는 의의

2017년에 미국에서 촉발된 ‘#Me Too’ 운동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극명하게 써 내려간 《82년생 김지영》은 베스트셀러로 등극했고, 영화로 제작되면서,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선은 엄격해졌다. 그 뿌리에는 김학순의 커밍아웃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배우고, 여성의 지위 문제를 고민해 나가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상호 공감의 연대가 탄생할 충분한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를 배우는 행위는 현대적 과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터다.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이 입은 피해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당시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전 ‘위

안부'의 증언을 부정하는 발언을 가해국을 대표하는 각료 등의 정치인이 꾸준히 지속하는 행위는 전 '위안부'에게 전쟁 중 입은 직접적 피해 이상으로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김학순의 최초 고백이 있는 지 어언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가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어도 '위안부'였던 피해자는 변함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채이다. 이대로는 그녀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피해가 계속되지 않을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여성들에 대한 가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통절히 바라본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대적 과제를 아우르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에 사회의 성숙도가 가늠된다. 그렇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실, 배경, 이 문제를 둘러싼 경위, 일본 정부의 대응, 한국과의 갈등, 피해자의 바람 등을 이성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성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한일 양국의 장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를 학교에서 가르쳐 나갈 담당자는 역사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이다. 교사 스스로가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나아가고 그를 통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큰 과제인 셈이다. 용기를 내 목소리를 드높인 전 '위안부' 분들에게서 교훈을 배워 역사학에 입각한 교육 실천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토론

김지민 (컬럼비아 대학)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곧 국제사회 전체에서 전시 하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계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위안부’ 운동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룬 시민운동 중 하나입니다.²⁾ 이런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발전과 확장은 이 문제가 여성인권 문제로서의 보편성과,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하에 아시아 피해국 여성들이 동원된 역사적 특수성이 긴장을 이루면서 국경을 넘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지금 새로운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안부’ 운동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외에서는 각 사회의 맥락과 특성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피해 국가의 정부, 단체, 국제기구가 주도하여 가해국인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는 운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위안부’ 운동이 확대되면서 얻은 성과가 많은 반면, 최근에는 이 문제를 정부와 외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의 한계 또한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관계나 역사 갈등의 문제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안부’ 제도 자체가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럽 여성들이 피해자였던 국제적인 측면이 있고, 여기에는 식민주의, 민족, 계급, 젠더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생존자들이 용기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와 연결되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외 여러 나라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야기되고 교육되고 있는 모습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션에서 세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미국, 독일,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교육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먼저 알렉시스 더든 교수님은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이야기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서 이해되도록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인종 국가이고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발달한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가르칠 때 먼저 ‘강간’ 혹은 성폭력의 사전적 의미를 학생들이 찾아보게 하고 그 강제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2) 정진성,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19(2) (2003).

더든 교수님이 이 발표에서 강조했듯이 ‘위안부’ 생존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함으로써 계속해서 전쟁 중에 여성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이 발표문에서 교수님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그들이 기억하는 노래,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야기 등 여러 형태의 자료를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일 것이고, 경직되지 않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더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르칠 때 동아시아의 식민주의 역사의 맥락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 인권과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인 측면이 중요하지만, 식민지 질서와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강압성과 그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히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대상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했음에도 식민지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위안부’ 제도가 그냥 인신매매도 아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 인신매매였음을 잘 드러내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³⁾ 교수님께서 발표문에서 영화 “귀향”에서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피해자들의 어린 나이와 관련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정용숙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독일과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할 때 종종 독일과 대비되곤 하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안에서 어떤 다양한 시각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역사적 책임에 대한 기억 문화가 꾸준한 진전을 보였지만,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독일 사회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나치의 강제 성매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식이 부족한 면을 드러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전후 독일이 전쟁과 관련된 기억 문화를 발전시켜왔지만, 그것이 유럽 안에 머무는 한계가 있고 제국주의 과거를 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이 나치의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기억

3) Margaret Stetz, “Teaching about the ‘Comfort System’ of WWII: The hidden stories of girls,” in Danielsson, S.K.(Ed.) *War and Sexual Violence: New Perspectives in a New Era* (Verlag Ferdinand Schöningh, 2019): 35-49.

문화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강제 성매매 피해자 문제에 대한 공식적 피해 인정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 더불어서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소녀상 설치와 일본측의 철거 요구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글에서 지적하신 독일 사회의 ‘위안부’에 대한 시각으로부터 최근에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히라이 미쓰코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일본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수업내용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체를 아우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수업과정을 통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일본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인들이 ‘위안부’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위안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역사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 히라이 미쓰코 선생님의 ‘위안부’ 문제 교육방법은 더든 교수님이 설명하신 미국에서의 접근법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식민지배와 ‘위안부’ 제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차이일 것입니다. 더든 교수님께 질문드린 것과 반대로 히라이 선생님께 여쭙보자면,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의 일부로 ‘위안부’ 문제를 가르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일본의 교과과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교사가 이 문제를 가르칠 때에는 어떤 과정이나 계기를 통해 가르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사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관련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학교와 사회에서 이 문제를 더 널리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논의됨으로써 각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들이 움직일 때 ‘위안부’ 운동이 큰 힘을 얻고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이경훈 (보라고등학교)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들어서서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들을 돕는 지원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제사회는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의 보고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게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성노예제 특별보고자’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 2001년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지와 연대,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1995년 일본에서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해결 의지를 촉구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하 위안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여 년 가까이 되었다. 또한 위안부 운동은 이제 생존 피해자가 없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때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위안부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된다.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역사갈등이 아니라 초국가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역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관한 다른 분야의 자료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게다가 존재가 밝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대다수의 자료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또한 이 자료들은 당시 공권력이 ‘공인과 은폐’라는 이중전략 아래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운영했다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전모를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부정주의자들은 ‘실증’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자 측에서 생산한 문헌자료를 절대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붙이거나 무시하면서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실증’을 근거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운영한 일본군‘위안부’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더든 교수는 ‘할머니 역사(일본군‘위안부’ 역사)’에 관한 정부 문서 외에 인권 옹호자들과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과 노래, 미술 치료 작품 등 수집 정리해 온 자료의 가치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더든 교수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 중고등학교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역사 수업을 할 경우, 일반적 문헌 자료를 사용하여 수업할 때보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그들이 남긴 자료를 갖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반응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 지점에서 더든 교수에게 한가지 질문이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비롯한 구술작업과 미술치료 작품 등이 역사적 사실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 문서나 가해자의 주장만큼이나 역사적 사실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타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더든 교수가 발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 ‘가짜뉴스’를 언급한 것처럼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역사부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교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교실에서 역사부정을 시도하는 학생들은 유튜브와 언론에서 몇몇 문헌자료를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한 자료를 갖고 마치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가해자들이 독점했던 문헌 자료 이외에 역사적 사실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비문헌자료(피해자의 목소리와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주고 학생 스스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은 역사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현재 만연하고 있는 역사부정 시도에 대한 사례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국적과 지역에 관계없는 비문헌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민족주의적 문제를 넘어 보편적 인권 문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일본 사회는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과 역사부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서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의 역사부정주의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역사전’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현장에서 교과서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관계사 수업을 5차시에 걸쳐서 실천하고 있는 히라이 미치코 선생님의 활동에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 5차시 분량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수업 실천이다. 이 정도의 수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교사의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학기 초에 미리 수업 진도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문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위안부 문제를 외교 카드로 사용하는 한국에도 문제가 있다. 의연한 태도로 한국에 대처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현 시점에서 보자면 악이나, 당시는 먼저 나서지 않으면 먹히는 세계였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지금의 문제는 한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와 같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학급의 경우, 히라이 선생님께서 이후 수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다루었다면 혹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도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한일 역사갈등문제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 감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피해자에게 동조하는 감상이나 ‘나였다면’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너무 슬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처럼 공감하고 그를 토대로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야만 했는가라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다.” 와 같이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이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한일 간 역사갈등 문제를 넘어 전시여성 성폭력과 관련된 보편적 인권문제의 주요한 사례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 문제를 넘어서 보편적 인권문제로 생각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학생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가 간의 민족적 감정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학생, 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역사 수업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언론과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에 관한 정용숙 선생님의 발표문은 최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관심있게 읽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독일 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있는 행동으로 유럽 사회에서 다시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이지만 2012년 연방의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결의안 동참 거부나 2016년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한계를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의 언론과 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독일을 비롯한 서구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넘어서 3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위안부 운동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문제는 독일 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역사갈등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 문제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용숙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고 독일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인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독일 언론과 사회에서는 가해자로서 독일군의 전시성폭력 행위(소련을 비롯한 침략국에 대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피해자로서 소련군이 전후 독일 여성에 대해 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둘째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역사적 불의에 대한 고발을 넘어 전시성폭력과 보편적 여성인권에 대한 (독일과의) 연대를 지향한다면, 그 목표는 기념물

의 설치 자체보다는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맥락과 연결할 수 있는 독일인의 기억이나 독일 내부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독일의 경험과 연관된 여성 인권 기념물(평화의 소녀상과 같은)이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 갈등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문제로 다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을 독일 중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짓는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민족주의적 맥락의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독일의 홀로코스트 성찰문화와 같은 맥락에서 전시 여성 성폭력을 반대하고 반전평화의 효과적인 수업사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

해외 각 지역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성격과 의미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대표)

발
표

독일베를린의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설치 과정과 의미

이광빈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아시아의 지울 수 없는 흔적: 일본군'위안부' 사진을 통해 기억하다

안세홍 (사진작가)

토
론

소현숙 (한국학중앙연구원)

신보영 (문화일보 국제부장)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해외 위안부 기림비의 성격과 의미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

2007년 여름, 미 연방의회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역사적 책임 인정, 그리고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한 연방하원121 결의안 - 일명 “위안부결의안” - 이 통과된 후, 이 캠페인을 주도했던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이제는 일본이 뭔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일본의 역사왜곡은 오히려 거세어져만 갔다.

연방하원121 캠페인을 이끌면서 다져진 실력을 기반으로 하여, 2010년 겨울, 시민참여센터(당시 한인유권자센터)의 주도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시립 도서관 마당에 해외 최초의 공공부지 기림비가 세워진다. 소박하고 자그마한 이 기림비는 팰리세이즈 팍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나 한번씩 들여다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구조물로 남을 수도 있었으나, 일본정부와 일본 정치인들의 무례하고 무모한 철거요구로 인해, 오히려 뉴욕타임즈와 폭스뉴스 등 주류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고, 이는 다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에 불을 붙였다.

논란이 생기면 언론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면, 이슈 자체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도 커지는 선순환 고리가 생긴다. 팰리세이즈 팍 기림비 이후 미주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림비 세우기 열풍이 불었고, 지금 미국에서 시나 카운티 공공부지에 기림비가 세워져 있는 곳은 아홉 곳 (팰리세이즈 팍(NJ), 낫소 카운티(NY), 버겐카운티(NJ), 글렌데일(CA), 페어팩스 카운티(VA), 유니온 시티(NJ), 브룩헤이븐(GA), 샌프란시스코(CA), 포트 리(NJ))이며, 기림비나 소녀상이 세워진 사유지는 여섯 곳(가든그로브(CA), 사우스필드(MI), 클리프사이드(NJ), 맨하탄(NY), 애난데일(VA), 휴스턴(TX), 햄든(CT))과 캐나다 토론토에 한 곳이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의 중대성과 인류보편성을 널리 알리고, 침묵속에 생을 마감하거나 아직도 싸우고 있는 할머니들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세워진 것들이다. 또한 아직도 왜곡과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높여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압박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전세계 어디에서든 기림비 건립 시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선제적으로 막고, 이미 세워진 기림비들도 철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 시나 로컬 정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형태의 공공부지 기림비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것이 소녀상이 되었든, 비석이 되었든, 그 비문의 내용 즉, “위안부”란 일본제국이 주도한 끔찍한 성노예제의 희생자이며, 그 숫자는 십여 개 국 출신의 수십만 명이었고, 이는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엄청난 전쟁 범죄이자 반인륜범죄였다는 사실을 외국에서 공식적인 역사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외국에서 공공부지에 기림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나 카운티 정부 등 지역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지의 다인종 커뮤니티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정부나 일본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을 때, 선불리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들의 편이 되어 기림비나 소녀상을 지키는 일에 현지 커뮤니티가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비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혹여 한일간의 역사분쟁에 선불리 끼어드는 것이 아닌가, 또는 미국이 두 우방 사이에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러한 점은 일본정부가 적극 공략하는 점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안보외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미국사회에 알리는 현지 운동단체가 한국정부나 중국정부의 사주를 받았다는니, “위안부” 운동은 반일운동이라느니,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면 해당 지역의 일본계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니 하는 거짓 중상을 하면, 미국인들의 지지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2013년 해외 최초로 소녀상을 세운 글렌데일 시와, 2017년 새로운 디자인의 동상을 세운 샌프란시스코시이다.

일본계 주민들과 일본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반대로비에도 불구하고 글렌데일 시에 소녀상이 세워지자, 일본계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정부를 등에 업고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소녀상 철거소송을 벌인다. 그런데 이미 소녀상 설치를 논의하는 시 공청회에서 이들의 역사 부정 태도와 억지주장에 대해 잘 알게 된 글렌데일 시의원들은, 소녀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언하며, 3년간 이어진 항소와 상고까지 이겨내며, 그 약속을 지켜냈다. 또한 소녀상 설치 때부터 지지를 표명해 온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도 끝까지 글렌데일 시와 할머니들

편에서 일본정부의 소녀상 철거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지켰다. 그런데도 매년 엘에이에 새로 부임하는 일본 총영사는 지금도 글렌데일 시와 계속 접촉을 유지하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소녀상을 철거할 수 있느냐고 시의원들에게 대놓고 물을 정도로, 호시탐탐 소녀상 철거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 “위안부” 기림비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미 일본정부의 접촉을 받은 일부 시의원들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림비 건립 계획을 주도하던 중국계 활동가들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세운 후 소송에 맞서고 있던 거주한미포럼(현 위안부행동)에 SOS를 쳤고, 우리는 즉각 이용수 할머니를 극비리에 초청하여 샌프란시스코 공청회에 모시고 갔다. 할머니의 증언마저 거짓으로 매도하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던 일본계 반대자들의 태도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다인종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 CWJC (위안부정의연대)는 중국, 조선, 필리핀 소녀와 김학순 할머니를 형상화한 새로운 디자인의 기림비를 2년만에 세우고 이를 샌프란시스코 시에 기증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시와 자매도시이던 일본의 오사카 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시가 이 기림비를 시 자산으로 편입시키면 60년간의 자매도시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을 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자매도시를 끊겠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하면서, 아랑곳 않고 이 기림비를 시의 자산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건은 오히려 미국 주류언론들의 관심과 조명을 받으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본정부의 행태만 미 주류사회에 더욱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펠리세이즈 팍이나 브룩헤이븐에 세워진 기림비도 마찬가지였다. 기림비를 세우기 전, 후에 일본정부의 거센 압박이 있었지만, 이미 “위안부” 역사를 시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인 시 관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지 언론을 통해 일본정부의 방해공작과 역사수정주의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현지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공공성의 힘이고, 지금도 공공부지 소녀상 및 기림비 철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인들만 이용하는 한인 문화회관이나 한인회관, 한인타운 내 쇼핑몰이나 한국식당 등 사유지에 소녀상이나 기림비가 세워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공부지에 장소를 찾다가 일본의 방해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유지로 간 것이라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이슈화하여 현지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일본정부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할머니 운동에 타격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여성인권문제로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안부” 문제를, 한인들끼리 푹푹 묻

쳐서 반일을 외치는 편협한 민족주의로 비치게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해외에 세워지는 기림비는 공공성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커뮤니티가 주도하여, 다인종 커뮤니티의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공공부지로 기림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세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하며, 정치력과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이를 위해 일본정부를 압박하려면 해외에서 어떤 전략을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이유가 반일감정이나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라, 진정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개선하고, 인류보편적인 인권문제로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라면, 더 이상 한복입은 단발머리의 소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위안부” 제도가 실시되었던 여러 지역의 특성, 그리고 실제 “위안부” 피해를 입은 여러 인종과 계층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림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소녀상 '베를린 모델'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광빈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 소녀상과 함께하는 베를린의 발랄한 시위

소녀상의 '베를린 모델'을 이해하려면 베를린 시민사회, 시위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베를린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반년 정도 지난 2018년 3월, '세계 여성의 날' 집회를 스케치하기 위해 취재 나갔다. 베를린 도심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나와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행진은 축제와 같았다. 시민들은 몸을 흔들면서 행진했다. 시위대의 선두에 선 트럭에서는 테크노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 손으로 유모차를 밀고 있는 한 여성의 다른 손에는 담배가 들려있었다. 한국에서의 '세계 여성의 날' 집회와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시위에는 메인 트럭이 있다. 그 트럭에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테크노 음악에 맞춰 어깨춤을 추면서 마이크를 잡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홍보하고 있었다. 행진이 끝난 공원의 무대에서도 파독 간호사 할머니들로 구성된 국악팀이 공연했고, 젊은 교민 여성이 올라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국 교민 뿐만 아니라 전쟁 피해를 본 여러 민족의 여성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공원 시위대의 상당수는 맥주병을 들고 있었고, 춤을 추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 시위는 여성만 참가할 수 있었다. 무거운 성명이 이어지면서도 집회는 축제와 같았고, 무거운 내용의 성명을 읽는 이들도 흥을 잃지 않았다.

베를린에서 세계 문화의 날 등 여러 기념일에 현지 여성 및 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 민족이 모인다. 야지디족 여성들, 수단 여성들 등이다. 독일의 관대한 난민 유입 정책으로 많은 민족이 베를린에 모일 수 있게 됐다. 물론 독일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독일의 시골, 특히 서베를린에 지역에 가보면 '베를린은 독일이 아니다'라는 농담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베를린의 여러 집회 및 행사에서 보면 소수 민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민족주의의 그림자는 크지 않다. 민족의 이야기가 보편성, 다양성 속에 녹아들어간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그렇다. 이런 베를린의 다양성 속에서 꾸준히 다뤄져 왔

다. 물론 교민들의 노력이 컸다. 교민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현지 시민들은 당연히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한다. 그렇다고 반일 구호까지는 가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3년간 여러 전시회 및 집회 등을 취재했지만 한국어로 '왜구'라는 단어를 베를린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일본 여성들도 항상 소녀상 옆을 지켰다.

베를린에서 각 민족의 피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발랄한' 집회 등을 통해 연대한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보편성의 범주에서 강한 유대감, 연대감을 형성한다.

베를린에서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역시 여러 소수민족 단체, 현지 시민단체와 연대해왔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갔다. 유학생들, 파독 간호사 할머니들이 응원군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팬데믹 상황이 심각한데도,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과 싸움을 시작하면서도 뒤가 든든했다. 현지 시민단체, 소수민족 단체들이 이번에 응원군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했다. 2017년에는 길원옥 할머니가 베를린에 와서 분쟁지역에서 온 난민 여성들에게 나비 기금을 전달한 것 같은 활동 등도 소녀상을 철거 문제를 둘러싼 연대의 씨앗이 됐다.

더구나,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지역사회와도 소통해왔다. 소녀상 인근 상점과 건물주를 상대로 설치 몇 개월 전부터 찬찬히 취지를 설명해갔다. 향후 소녀상의 영구설치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 시민들과 교감하기 위해서였다. 올 초에는 지역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교육 활동을 벌여왔다. 교장을 설득해 학교 수업의 일환이 됐다. 독일 학생들이 만든 소녀상과 관련된 작은 작품들은 미테구청 앞에서 올 초에 전시되기도 했다. 일련의 일들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여론도 소녀상에 대해 우호적으로 된 것이다.

□ 한일전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소녀상 '베를린 모델'

소녀상 '베를린 모델'은 소녀상을 지켜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도 다르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의 공세에 코웃음 친 것이었다.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의 로비와 압박에 사실상 굴복했다.

이후 현지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났다. 소녀상 철거 명령이 담긴 미테 구청의 공문 내용과 일본 측 인사들의 철거 압박 논리를 살펴보면, 일본 측은 이번에도 소녀상을 일조의 반일 캠페인으로 간주했다. 반일 민족주의로 몰아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분쟁 사안으로 가둬놓아 독일 당국이 부담을 느끼도록 유도했다. 관방장관과 외무상이 잇따라 나선 일본 측의 로비와 압박은 초반에 작용했다. 미테 구청장은 '소녀상 지키기' 시위에 깜짝 등장해 철

거 유보 발표를 하면서 "베를린 거주 일본인들로부터 많은 항의서한을 받았고, 연방정부와 베를린시로부터도 거센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베를린 시민사회가 들고일어나면서 일본 측의 논리가 효력을 잃기 시작했다. 베를린 시민사회, 교민사회는 일본이 걸리기만을 바랐을 반일 민족주의의 덫을 피해갔다.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 근거를 보더라도 민족주의를 파시즘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독일 사회의 인식을 일본이 파고든 흔적이 나타난다. 미테구청은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코리아협의회,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현지 시민단체인 메디카몬디아알레, 이라크의 소수민족 야지디족 단체, 일본여성이니셔티브 등이 개최한 소녀상 지키기 기자회견에서는 철저히 소녀상의 보편적 가치가 강조됐다. 이들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실재했던 문제이고 유엔에서도 인정한 문제"라며 미테구를 비판했다.

특히 교민들은 반일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설치를 추진했고,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한 반대 투쟁을 주도했지만, 교민들의 역할이 컸다. 관련 집회 전에 중도진보 정당의 당직자 출신으로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 젊은 여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민족주의 자극하는 운동방식 싫어, 째뽕된 목소리가 내안에서 아우성이지만 외면할 수 없어 주말에 기념비가 세워진 공원을 찾았다." 소녀상 지키기 집회에 온 교민들은 다양했다. 예술인, 건축가, 요식업 종사자, 여행 작가, 유학생, 파독 간호사 할머니 등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의 교민들이 모였다. 평소 집회와는 거리가 먼 교민들이 많이 참여했다. 집회 절반 정도는 현지 시민이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지켜보더니 한참 동안 함께하기도 했다. 현지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우리는 일본 당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독일 당국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서 지역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로 진보정당이 호응했다.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점도 있지만, 미테구청이 철거 명령을 유보한 것은 지역 정치권의 호응이 크게 작용했다.

□ 소녀상 '베를린 모델' 속에 나타난 지역정치·정당정치

소녀상의 철거 설치 및 철거 명령, 그리고 유보에 있어서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지역정치의 몫이었다. 그것도 시(市)도 아닌 구(區) 단위다.

정당의 하부 지역 단위에서 상부 지역 단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사회민주당이 제1당인 베를린시 연립정부는 일본의 반발 이후 미테구청을 압박했다. 그런데, 미테구의 사민당 지부는 비문 수정의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철거 명령에 반대했다. 정당 내 의견 형성 과정이 수직적이지 않은 독일 정치의 단면이다.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에는 독일 언론도 큰 역할을 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덮으려는 그간 일본의 시도를 이번 사건을 통해 조명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의 독일 여성들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도 독일 사회에서 처음으로 부각됐다. 일본의 로비로 시작한 일이 일본에 끊어 부스럼이 됐다. 나치 독일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전시 성폭력 문제도 끄집어내졌다.

철거 명령을 주도한 미테구청장이 녹색당 소속인데, 녹색당 구의원들이 이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미테구의회는 1년 기한인 소녀상의 존치 지지 결의안을 소수정당인 해적당이 제출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다. 연방하원에도 진출해있지 않은 소수정당의 지역 지부가 낸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대화와 토론에 의거한 독일식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소녀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소녀상 '베를린 모델'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부의 역할, 없어서 좋았다.

지난 10월 프랑크푸르트총영사 국정감사에선 한 여당 의원이 베를린 소녀상 문제로 총영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 유튜브를 보면 '버럭'이라는 자막이 표현돼 있다. 댓글도 해당 여당 의원을 응원하며 외교부와 주독 한국대사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일색이었다.

정부의 역할은 어때야 했을까. 한국 외교부는 베를린의 소녀상 설치 직후 일본 각료들이 잇따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독일 정부를 상대로 압박해 들어간 이후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애초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무리 현 정부가 당시의 합의 내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주독 한국대사관은 특히 소녀상 철거 명령 국면에서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았다. 한국대사관은 역시 시민단체의 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한국대사관은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 같았다. 최소한 독일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하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중립을 지키도록 압박하지 않았을까. 철거 명령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적 절차 등을 알아보며 시민사회에 조언하지 않았을까. 이 발표문도 공식적인 행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녀상 지키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재 내용을 모두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상에 맡겨본다.

소녀상 철거 명령 국면에서 연방하원의 녹색당 한 의원이 정범구 한국대사에게 한일 대사관 간의 중재 테이블을 만들 테니 함께 논의해보자고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일이 있었다. 이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 순간 베를

린의 소녀성 설치에 반일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 사안으로 변질된다. 물론 정 대사는 이를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철거명령 보도 직전 외교부는 왜 일본 비판 브리핑을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공식적이고, 어느 선까지 움직여야 할까.

주독 한국대사관이 베를린 당국의 '철거명령'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베를린 현지 시각으로 7일 저녁 시간 즈음이다. 대사관은 긴급 사안인 만큼, 당연히 밤 시간이라도 외교부 본부로 전문을 보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대다.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은 그로부터 반나절이 이상이 지난, 한국 시각으로 8일 오후 1~2 시께 독일 측을 상대로한 일본 장관들의 '철거 요구'를 비판한 브리핑을 했다. 일본 측이 공개 요구를 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였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철거명령'이 반영되지 않고, '독일에 철거하라고 일본이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일본의 시도'를 비판한 브리핑이다.

아직 '일본의 시도'가 성공한 '철거명령' 기사는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발표자는 7일 오후 관련 사실을 알았지만, 공문 내용을 분석해 대응 논리를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시민단체 측의 요청에 기사를 보류하고 있었다. 한국시간 오후 6시께 기사를 쓰기로 했다.

왜 외교부는 기사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독일 측의 철거 명령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이야기는 쪽 빼놓은 채, 마치 철거 명령은 모르는 듯 브리핑을 하며 일본을 비판했을까. 몇시간 후 철거명령 기사가 나온 뒤에는 상황이 급변했다. 국내 여론이 독일과 일본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었다. 갑작스러운 브리핑은 여론이 들끓기 직전에 그동안 침묵해오던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나마 그나마 외교적 견제구를 날렸다는 표식을 남겨둔 것으로 봐야 할까.

사실 정부가 일본 정부를 견제하려 했다면, 철거 명령 한참 이전에 했었어야 했다. 그렇다면 더 독일 외교부, 베를린시에 대한 일본의 로비에 방패막이 역할을 다소 했었을 것이다. 외교부의 브리핑은 철거 명령을 내린 독일 당국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 서두른 면도 있지 않았을까.

아시아의 지울 수 없는 흔적
 アジアの消せない痕跡
 Traces That Cannot Be Erased in Asia

안세홍 (사진작가)

안녕하세요.

사진가 안세홍 安世鴻 AHN Se-hong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겹겹프로젝트重重プロジェクトJUJU Project 이름으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을 만나 증언과 사진을 기록하고, 그녀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생시절인 1991년도 김학순 피해자가 처음 증언을 하면서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그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벅찼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난 후인 1996년도에 사회평론 길 잡지사에 일을 하면서 `나눔의 집`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서 갔지만, 아픔을 가진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될지 참 막막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가해자라는 생각도 했었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서도 그분들이 제 마음을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나눔의 집을 개인적으로 3년간 시간이 날 때마다 왔다 갔다하면서 사진은 찍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주변을 정리하거나 당시에 기념관을 만들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고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동안 피해자로부터 과거의 얘기를 직접 들으며 교감을 나누었고 이 문제에 대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였고,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제가 잘 하는 사진으로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아시아 다른 나라에 피해자 있는 곳이면 발로 찾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눔의 집 뿐만아니라, 한국의 경기도, 경상도 등 다른지역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고, 2001 년도에는 일제 강점기시절, 중국에 일본군 성노예로 동원 되어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찾고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을 위해 연구자들과 같이 연변에서 베이징, 상하이 내륙 깊숙한 우한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모두 열두 분의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할머니들을 만난 이후에도 저 혼자 2003 년, 2005 년도 계속해서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사진과 영상 증언을 기록하며 집고치기, 의료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독일 등 여러곳에서 사진전, 강연회, 매체 발표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 문제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일간만이 아닌 아시아의 인권문제로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수 많은 나라인데 다른 나라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를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자료만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2010년 전후부터 일본에 살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부 중국인 피해 여성들만 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간만의 역사 갈등 문제로 비추어 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막연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 보는 이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아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인권 문제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숨기다 못해 이제는 우익들이 나서서 왜곡되게 알려나가는 것을 보고, 조선, 한국인 피해자만 알려 나갈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피해자를 함께 알려 나간다면 국제사회에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중국 현지 피해 여성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가 피해를 받은 그 나라의 변방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군이 전투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점령하고 여성들을 강제로 군부대에 끌려가 성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후반기, 동남 아시아 아래 지역으로 갈수록 일본이나 조선에서 동원되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고, 일본에서 가는 보급품이 연합군에 의해 끊기면서 성병방지를 위한 콘돔이 사병에게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군부내에서의 성폭력은 위안소 시스템 밖에있었기 때문에 성병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증언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병은 물론이고 임신한 여성도 생기게 되었고, 이후 일본군은 임신이 안되는 여성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임신이 안되는 여성을 어떻게 선별할까요? 10대 초반 생리 이전의 여자아이들을 동원하였습니다.

현지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고서 자신이 살던 곳에 그대로 남겨지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웨이샤오란 韦绍兰 WEI Shao-lan 피해자는 일본군에게 끌려갈 당시 한살도 안된 딸아이를 업은 채 갔습니다. 군부대에 감금 당한채 성폭력을 당하는 동안에도 아기는 우는 채로 옆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만에 탈출을 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기는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고,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모자는 평생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에도 주변의 차가운 시선뿐 아니라 친척들조차 모자를 천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피해 여성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가족에게 평생 털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술라웨시Sulawesi 티자Tija 피해자는 아버지나 형제가 알게 된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이수단 李壽段 LEE Su-dan 피해자는 중국에 회이룽장성黑龍江省Heilongjiang에 동원되어 갔지만, 전쟁이 끝나고서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 오지 못한채 동녕東寧Dongning의 스먼즈石門子 Simenzi 위안소 인근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위안소에서의 아픔 때문인지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해 나중에는 아기에 대한 집착마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타국에서 사투를 벌이다 벌이다 운명을 달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전쟁이 끝났지만, 과거의 아픔을 달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쟁이후 살아오는 동안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국인 일본과 피해국 정부의 무관심속에 방치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아픔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하나의 아픔이 아닌 커다란 고통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녀들의 국적, 피해사태, 동원된 나이,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타인에 의해 고통으로부터 풀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성노예 인한 아픔의 크기를 그 무엇으로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다.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현지의 지원 단체나 활동가를 통해서 한두달 전부터 연락합니다. 중국 광시좡족 广西Guangxi Zhuang 구이린桂林Guilin에서도 2시간 떨어진 곳에 사는 허위전 何玉珍 HE Yu-zhenh 피해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전날에도 집 부근까지 왔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러 들어가기 전 마을 입구에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3시간 전에 돌아 가셨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들어 갔을 때에는 장례식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거실에 시신만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서야 장례식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고통이 피해자들은 빠른 시간에 돌아 가고 있고, 지금 만나는 피해자들도 인터뷰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억들이 이미 토막나서 전체를 모두 기억하시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을 기억 계시고, 기억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번 가야하지만 온전한 얘기를 조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날 때 장시간 만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2 시간 이상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문힐 수 밖에 없어, 언젠가 될지 모르는 만반의 준비를 하다보면 언젠가 될지 몰라 우선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진가로서 이런 피해자들을 만나면서도 사진을 찍고 얘기를 나누어 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피해자를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활지원을 위해 돈을 가져다 드렸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점점 그 돈이 피해자를 위해 쓰여 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중국에 계신 조선인 피해자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집도 창고를 개조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었고,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한국과 일본에서 16 명의 자원봉사자들 모집해 직접 중국으로 가 창고에서 살고계신 박차순할머니의 집을 고쳤습니다. 박차순 피해자의 집은 천장도 제대로 없는 방 이었는데, 여러명이 같이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방안에는 단열을 하고 천정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정신분열증을 알고 계시던 이수단 피해자입니다. 건강진단을 통해서 몸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의 피해자를 만나러 갈때마다 의료, 약품, 복지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있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너는 사진가냐, 아니면 활동가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하는데 경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피해자와 함께하고자 했던 초심입니다.

모두의 역사와 인권으로

지난 7월에는 아시아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 여성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의 기록을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우선 21명의 목소리를 담았고, 대중서로 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마음은 위로를 받았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이야기 해준 것은 저 혼자 알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자신과 같은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

는 과거가 아닌 우리에게 전해주는 미래의 평화메시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반 개개인의 역사는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 개개인의 증언을 중요하고 그 목소리들이 쌓였을때, 역사는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픔의 역사, 피해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아픔의 역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나라만의 관심이 아니라, 피해국 간의 긴밀한 연대가 있어야 하고 그 기반에는 대중이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인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해결이 있기전에 사람들이 알아야만해결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막상 일본군 성노예 대해 물었을때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소녀상, 끌려감, 강제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 피해자만 생각하며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몇개의 단어, 반일 감정을 넘어 좀더 넓게 객관적으로 봐야합니다. 점점 피해자가 사라지는 가운데 그분들의 목소리의 기록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전쟁과 인권문제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현지의 피해자와 지원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코로나로 피해자들은 생활에 힘겨워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장은 쉽게 움직일 수 없지만,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또다시 떠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70여명의 피해자의 이중통역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증언을 녹취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그 동안 기록해 온 내용을 디지털 아카이빙하기 시작했고, juju-project.net 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학생, 젊은층의 눈에 맞춘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소현숙 (한국학중앙연구원)

제2세션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의 소녀상 설치 문제, 그리고 안세홍 작가의 아시아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작업 등을 통해 그동안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다양한 시도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김현정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공공부지에서 소녀상 설치 노력이 그 지역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위안부’ 이슈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순환구조를 통해, 기림비의 설치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알리고 전시성폭력에 대한 비판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만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었던 독일의 미테구 소녀상 설치 문제에서도 잘 드러났었습니다. 이광빈 기자님의 발표에서는 베를린에서 소녀상의 설치가 한국 교민 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단체, 현지의 시민단체 등이 함께 연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거기서 한일갈등이라는 민족주의적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족주의 프레임이 여전히 지배적인 국내에서와 달리, 해외에서는 민족주의 프레임을 벗어나 전시성폭력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문제로 사유되고 있고, 이것이 보다 광범한 지역사회의 설득력을 얻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가 단지 한일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었고, ‘위안부’로 동원되었다는 점이 최근에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한일간의 갈등이라는 좁은 틀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피해자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애써 오신 안세홍 작가님의 작업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선생님들의 발표 내용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가지 단상과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기림비 설치와 지역사회의 공감

우선, 이광빈 기자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철거명령을 내렸던 미테구청과 싸우면서 현지의 시민단체, 소수민족 단체들이 응원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응원과 공감 아래에는 어떤 기반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글렌데일의 경우 그

곳 주민의 상당수가 아르메니아인들이었고, 이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대학살의 경험으로부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해 공감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시민사회나 소수민족들의 공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정용숙 선생님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은 독일 나치의 강제성매매문제와도 연결되어 사고될 지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는 미테구 소녀상 설치 운동에서 그리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라거나 아시아의 문제라는 식의 틀을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문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이런 부분과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동 참가자나 지지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기림비의 설치에서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은 필수적이라는 김현정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면, 베를린의 사례가 특별히 베를린 모델이라고 지칭할만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인데요, 독일과 미국에서의 경험의 차이는 무엇이며, 특별히 베를린 모델이라 명명한 이유는 무엇일지요?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한복 입은 소녀상을 넘어선 새로운 재현의 필요

한일역사갈등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 ‘위안부’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좀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한복 입은 단발머리의 소녀만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를 입은 여러 인종과 계층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림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는 김현정 선생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독일에서의 기림비가 한복 입은 소녀상으로, 비문이 한글-독일어로 쓰여 있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을 함께 기억하려는 노력, 나아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다른 전시성폭력 피해자를 함께 기억하는 기림비 등으로 ‘위안부’역사를 보다 다층적인 기억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반전시성폭력의 연대와 더불어 반식민주의 연대의 가능성

‘위안부’문제를 전시성폭력이라는 보편적인 프레임을 통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식민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구 제국주의 국가에서 식민주의 문제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가시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

는 것은 인류사의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인데요. 그런 면에서 미국과 독일에서 반식민주주의의 연대의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민지인으로서 조선인 ‘위안부’의 독특한 위치를 언급하면 전시성폭력으로 단순화 할 수 없는 조선인 피해자의 피해의 복합성이 드러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과 독일에서 과연 얼마나 이해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민지인으로서 조선인 ‘위안부’피해의 복합성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민족갈등의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4.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광린 기자님은 독일에서 소녀상 철거명령 국면에서 주독 한국대사관은 공식적으로 불개입 입장을 취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한일간의 외교분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를 도와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철거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뻔채 일본을 비판한 한국 외교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왕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를 견제하려 했다면 좀더 일찍 개입해야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대사관을 나누어서 대사관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잘 한 일이고, 외교부는 좀더 일찍 개입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다소 헤갈리는데요. 대사관/외교부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외교부도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게 나았는데, 만약 이왕 개입하려 했다면 더 빨리 했어야 한다는 정도의 말인지 의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한일갈등의 프레임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한국정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게 좋다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기억이 고통의 전시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사진을 통해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아시아(백인 여성까지 포함)의 문제였다는 점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계신 안세홍 작가님의 작업이 앞으로 아카이빙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안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 사진과 증언을 통해 주로 피해자의 고통을 드러내고 가시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한 교육이 고통을 전시할 뿐 그 이상의 더

깊은 사유와 자기문제로서의 공감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는 없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피해자들에 대해 알리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이를 통해 이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안 작가님 개인의 과제는 아닐테고,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피해국 각국의 역사와 문화, '위안부'문제가 취급되어 온 맥락, 각 정부의 입장, 아시아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연대의 역사 등 생각해 볼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신보영 (문화일보)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 ‘전시 성폭력’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김현정 대표와 이광빈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사진작가 안세홍 등 3인의 발제문이 공통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이런 기반에서 출발하면, 미주에 세워진 기림비들이 왜 지역정부 뿐 아니라 현지의 다인종 커뮤니티의 지지가 필요했으며(김현정), 베를린 미테구의 소녀상 역시 다민족적인 보편 문제이면서도 지역정치 차원의 문제(이광빈)라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안세홍 작가가 다큐멘터리 취재 과정에서 “조선, 한국인 피해자만 알려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피해자를 함께 알려나간다면 국제사회에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했다는 경험적 부분과도 일치한다.

동시에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012년 위안부를 ‘성 노예(sex slave)’라고 지칭했던 것과도 상통한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과거사 현안이지만, 동시에 ‘전시 성폭력’이라는 분류에도 들어간다.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특수적인 사안인 셈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출발점도 이같은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래야만, 특히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이슈화가 가능하며, 기림비나 소녀상이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는 기념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일본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반일 민족주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 한국인 뿐 아니라 아시아인, 더 나아가 유럽인에게까지 자행됐던 이 전시 성 폭력에 대한 연구 범위를 넓혀야 하는 이유이며,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역사 연구를 이어가는 하는 이유다. 역사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movement의 결합이 위안부 문제의 지평을 넓히며, 이 문제의 보편성 획득 추구에 유용한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안세홍 작가의 작업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런 점에서 기림비나 소녀상 역시 ‘순례’ 또는 ‘인기’의 장소라는 인식도 버릴 필요가 있다.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역사,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주장을 웅변하기 때문이다. 장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정부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자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장소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 김현정 대표가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라면, 더 이상 한복 입을 단발머리 소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는 이유다. 특히 올해 윤미향 대표 사건을 계기로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지금은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심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에서의 위안부 운동 2.0을 위한 제언

위안부 문제의 글로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는 미국이다. 유일 슈퍼파워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건국 가치 중 하나가 인권이다. 물론 미국의 자국의 이해에 따른 '선택적 인권'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지만, 자국의 이해가 침해하게 갈리지 않는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나름 목소리를 내는 강대국이다.

이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원론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다. 과거 지미 카터 행정부는 아예 인권 외교를 표방한 사례다. 2007년 역사적인 하원의 위안부 결의는 2010년 펠리세이즈 파크의 기림비 1호 등을 가능하게 한 기본 동력이다. 행정부와 의회의 원칙적 입장 표명과 결의안 채택은 한인 단체들이 미국 내에서 기림비 및 소녀상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할 때 중요한 근거 문건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위안부 운동 2.0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역정부 및 로컬 소수인종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보는 원칙적 입장을 담은 미 행정부 및 의회의 공적 문서들이 축적되게 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은 미국의 한인단체들이 집합적으로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며, 이는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환기시키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었던 계기였다. 동시에 이를 통해 획득한 보편성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한일 과거사 문제로 치환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좌절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위안부 운동에 대한 리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외 위안부 운동도 2.0 버전을 생각할 때다. 특히 지난 11월 3일 미국 상하원 선거에서 한인 의원 4명이 무더기 당선됐다. 2018년 앤디 김 의원 당선으로 18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탄생했는데, 올해는 3명이 더 배출되면서 120년 미주 이민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민주와 공화당이 각각 2명인 데다 여성이 3명이다. 의회 입법 과정에서 한인 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에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위안부 운동에게도 좋은 기회다. 동시에 2007년 위안부 합의가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더욱 더 보편성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아시아계 의원에 대한 outreach 작업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토론

조운수 (동북아역사재단)

김현정 대표와 이광빈 특파원은 해외에서 기림비가 설치되는 과정, 그리고 설치 후 일본이 철거를 위해 어떠한 로비와 압력을 가했는지, 그런데도 기림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안세홍 작가님은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 침략한 모든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전쟁과 인권문제라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한국의 피해만 강조하다 보면 민족주의적인 문제로 환원되어 보편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기림비가 이제는 세계 각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기림비가 국경을 넘어서 미국 펠리세이즈 팍 시립 도서관 마당에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가 전쟁 당시 벌어진 조직적인 성폭력 범죄이며, 한일 양자 차원을 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기림비는 우리 사회와 문화가 다른 다양한 국가에서 피해자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의 아픔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단은 기림비만은 아닙니다. 안세홍 작가님이 최근에 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과 인터뷰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자 설치했던 소녀상이 일본의 로비와 압력으로 외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려 하면 할수록 일본 정부의 방해 공작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기림비와 관련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림비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이미지를 통해 피해자와 독자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때 여

러 가지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반일’이 아닌데,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다 보면 듣는 학생은 반일 감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좀 더 넓고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세션

일본군'위안부'문제, 어떻게 기억하고 교육할 것인가

발
표

피해자 운동을 넘어선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방향 모색

양미강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

일본군'위안부' 평화 인권 교육의 모델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토
론

김정인 (춘천교대), 최이락 (연합뉴스)

길윤형(한겨레신문), 김소라(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남기정(서울대),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호리야마 아키코(마이니치 신문)

생존자 16명에게 남겨진 시간, 2020년 한국의 자화상

양미강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

1. 한 단계 전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국사회를 달구었던 정의연 논란 이후 2020년을 마감하는 지금, 우리사회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한단계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늘 그래왔듯, 한바탕 소란으로 끝날 것인가?

■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법정) 20주년

- 2000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2000년법정은 아시아 8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고 세계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결합한 역사적인 민간법정
- 위안부 문제의 최고책임자인 일본 천황의 책임을 묻은 국제적인 법정운동
- 유고와 르완다 내전 등 끊임없는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마감하고 평화와 정의를 향한 새로운 21세기를 열기 위한 시대적 화두에 응답한 운동
-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과 전시중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적 네트워크들이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외형을 확장
-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아시아 전반의 피해사실을 입증

■ 운동의 성과와 백래쉬

- 국제적 성과로서 2000년법정과 그 이후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한국사회의 역사수정주의
- 국내 역사교육 강화, 한중일, 한일 역사교재의 출판, 유네스코 기록 등재 노력, 국내 전역에 박물관 건립, 국내외 소녀상 건립, 세계 각국의 결의안 추진운동 등 위안부운동의 발전

■ 운동 30년의 시간

- 한 세대가 오고 가는 시간, 운동의 계승과 발전의 두 축
- 한국사회의 현단계 진단을 통한 더 발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필요

2. 2020년 한국의 자화상

2020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간극들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운동이 발전해왔다고 여겨졌던 지난 30년동안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 원칙적 이상주의와 정치적 현실사이의 간극

- 30년전부터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해결요구와 한일 양국간의 정치적 현실
- 양국 정부 모두 국내 정치와 국내 여론에 관련된 정치행태와 외교적 현실

■ 민족주의적 국민 정서와 여성인권 운동의 논리의 간극

- 보편적 여성인권으로 부각된 위안부 운동과 국제사회의 호응
- 민족주의적 국민정서를 기반으로 지속된 국내사회의 호응

■ 피해자중심주의와 포스트 피해자 사이의 간극

- 한일협상의 주요논리인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과 현실 속의 다양한 피해자
- 포스트 피해자 시대로 강조점 이동과 피해생존자의 목소리 소멸 가능성

■ 문제해결 주체의 간극

- 법적 해결의 주체는 양국 정부지만, 정작 적극적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
- 시민사회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책임성과 지식인 그룹의 불명료성

■ 초국적 네트워크와 글로칼 네트워크와의 간극

- 초국적 네트워크 확산과 국내 각 지역간의 네트워크간의 확장성
- 2000년법정의 초국적 네트워크와 아시아네트워크의 간극

-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목소리와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간극
 - 시민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목소리와 2020년의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등장으로 인한 인식
 - 2020년 역시 진영논리에 의한 시민사회내의 분열적 인식
- 단일성을 요구하는 운동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연구의 간극
 - 어드보커시 중심의 시민운동의 과제와 다양한 연구 스펙트럼을 지향하는 연구 영역간의 간극
 - 연구와 운동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부족
- 진상규명 요구와 국내 입법 부재의 간극
 - 진상규명 요구와 한국 내 종합적인 진상규명법 부재 현실
 - 피해자단체들간의 개별화 전략과 의견의 분열

3. 생존자 16명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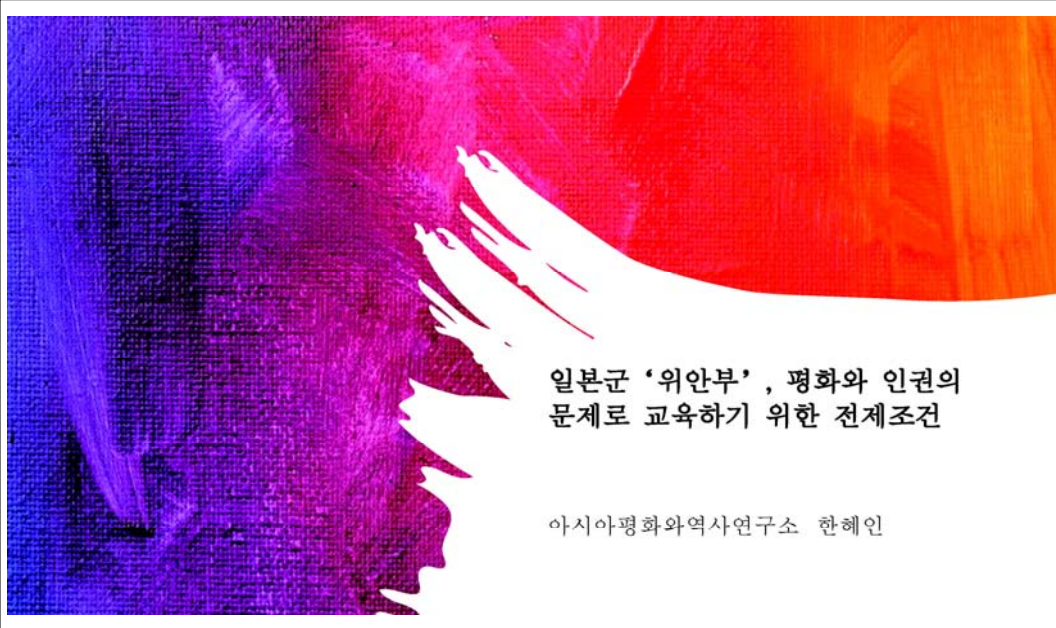
- 생존자 16명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간
 - 생존자의 나이 90대, 자연수명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간
 - 복지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접근 필요
 -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피해자성을 인정하는 접근 필요
- 생존자들의 원상회복의 의미 제고
 -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
 - 원상회복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
 - 국가적 차원의 생존자에 대한 최선의 예우가 무엇인지 고민
- 시민참여 공론장을 통해 정치적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와 간극을 좁히는 문제
 - 정치적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필요성
 - 국가 프로젝트로 사회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광범위한 공론장 확산을 통해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간극을 줄이는 노력
 - 공론장을 통한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참여 유도
 - 한일간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구체적 가능성 모색

■ 위드 피해자의 시대

- 피해자 없는 시대를 의미하는 포스트 피해자라는 용어가 갖는 한계 극복
-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무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언어 선택
- 시민사회, 연구자,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역할을 씨줄날줄로 묶어내고 집중할 필요
- 함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천

■ 한국사회의 피해자문제를 풀어나가는 모델

-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의 미투 증언자이었던, 16명의 생존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따라 한국사회 피해자중심주의를 푸는 모델



일본군 '위안부',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교육하기 위한 전제조건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한혜인

머리말

- 본 발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교육' 하기 위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그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무엇이었던지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의 존재는 '양가적' 혹은 이중적 인식 현상을 점검할 것임
- 이런 배경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의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해결할 수 없다면 '평화' 의 상태에 이를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새로운 '평화' 라는 관점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계적 시각과 일치해 왔는지, 민족 혹은 국가의 수난이라는 공공성 속에서 여성의 인권의 문제로 심도있게 '교육' 해 왔는 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음

우리 안의 '일본'

- 우리세대(60,70년대생) 있어서 '일본' 은 양가적
-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된 것은 1998년부터였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일본의 문화/대중문화는 우리 가까이에 있었음.
- 19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텔레비전 만화(캔디캔디, 마징가제트, 요술공주 세리, 플란타스의 개), 만화책(허리케인, 올웨스의 창, 그 외에도 일본의 기모노를 한복으로 바꾸어 그린 만화) 등을 '일본' 의 작품인 줄 모르고 향유해 왔음
- 기저 대중문화 속에서는 '일본' 이 대상화하지 않았음. 당시 일본의 문화는 '일본' 이라는 인식없이 일상의 감성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왔던 것은 사실.
- 일본의 대중소설 빙점의 플롯이 한국의 '겨울연가' 로 이어지고, 그 '겨울연가' 가 2000년대 일본의 50대 여성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깊은 현상



우리 안의 '일본'

-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문화가 일본을 밝히고 공공적 지위를 얻게 되는 담론 속에서는 “왜색”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온 국민의 ‘멀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었음. 역사에 있어서는 민족 수난의 역사로 바로세워야 할 역사의 문제로 생성.

➔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내면적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역사라는 ‘양가적 상태’에 있었음

1. 공공기억 속의 일본군 ‘위안부’ : 민족의 수난자로서의 정신대



경향신문, 1963.8.14. 일제는 처녀공출까지 해갔다.

- 광복전야, 일제의 발악. 8.15에 생각나는 말들』이라는 기사에서 정신대를 “속칭 여자공출”, “나이찬 처녀들을 전선으로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았다. 일제 병사에 인신을 공양한 것
- 1962년 **대한독립** 역사 교과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역시, ‘위안부’ 문제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제기
-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민족의 수난, 식민지 피해라는 관점에서의 ‘위안부’ 피해는 군인, 군속, 노무자 및 정신대와 구분하지 않는, 가시화된 피해, 공공의 기억으로 인지

• 1982년 교과서 문제 속에서의 정신대의 문제

정신대(정신대)
 <日本教科書内容(일본교과서내용)>
 ▲도 미혼의 婦人(부인)이자 女子挺身隊(여자정신대)의 이물이며 虜虜(로로)로 모인다. (三浦重(삼무라타) 日本史(일본사) P313)
 <내용결론>
 ▲日本(일본)은 1944년 女子(여자)정신대군무령을 공포하여 만12세이상 40세이 만의 여성에게 挺身隊(정신대)를 발부하여 虜虜(로로)에게는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하여 慰勞隊(위안부)에 처하였을. 강제동원된 여성은 남자와 같이 日本(일본)의 軍수공장이나 捕虜(남영)의 炊飯室(의식실에 투입하였고 일부는 日本軍(일본군)의 慰安隊(위안부)로 전락시키는 手段을 取할것임. 이와같은 事實을 『三浦重(삼무라타)의 婦人(부인)이자 女子挺身隊(여자정신대)의 이물이며 虜虜(로로)로 모인다』고 기술하여 日本(일본)의 비인간적인 手段을 의도적으로 은폐 왜곡사건임.

國史編纂委 분석 「日教科書왜곡」 내용
 조선일보 | 1982.08.06 기사



2. 향유되는 대중문화 속의 ‘정신대’ : 일본의 대중문화와의 연동



남성의 전쟁체험기, 피해자 증언생산 추이

- 일본에서는 ‘위안부’의 존재는 공공의 기억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사적 기록에서 ‘소문’과 같이 확산
- 병사의 전쟁체험기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많이 생산. 체험기 속에서는 병사 자신이 겪은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위안부’가 회고되기는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남성을 ‘위로’하는 대상으로
- 조선병사의 체험기에서는 동족 여성으로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지만 구해주거나 할 수 없는 ‘관찰자’로 존재

- 전쟁체험기를 통해 창작되는 재현물에서는 보다 더 노골적으로 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대표적 작품이 1965년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춘부전(春婦傳)'이다.
- 원작(1950년)에서는 조선인 '위안부' 였는데, GHQ의 검열로 일본인 위안부로.
- 한국에서도 비공식적 대중의 이미지에서는 위의 「춘부전」의 영향을 받아, 1974년과 1985년에 「여자정신대」라는 제목으로 성이 부각되는 스토리로 재현.
- 이 기사를 보면, 일본의 만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주인공 여배우의 '과대노출'을 은근히 홍보하고 있다.



1965년 일본에서 상영한 춘부전



한동안 스크린을 떠났던 여배우 최인숙(사진)이 張漢英(장한영)의 「여자정신대」에서 주연출발아 2년간의 침묵을 울렸다.

한동안 스크린을 떠났던 여배우들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이 영화의 주인공(주연)에도 최인숙이 피칭되었는데 최인숙이 열연의욕을 불태웠던 마디없이 전신으로 연기했다.

영화제명처럼 日帝시대강제로 정신대로 끌려간 한 국여인들의 수난역기인데 최인숙으로서는 데뷔이때 가장 가혹한(?) 過大露出의 役을 맡았다고.

2년沈黙개고 「女子挺身隊」主演

女優崔仁淑 다시 스크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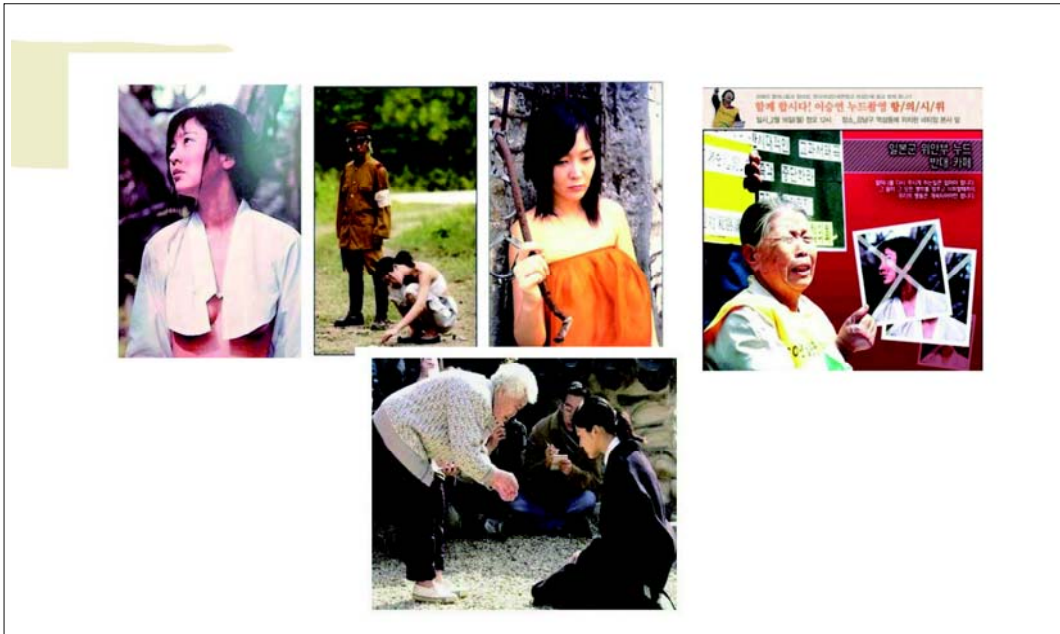
1974년 10월 21일 동아일보 「여자정신대」

• 90년대 이전의 한국의 '위안부' 인식

- 한국에서는 삼일절과 광복절과 같이 역사의 공적기억을 만들어 갈 때는 군인, 군속과 같이 남성의 피해와 더불어 가시화된 피해자로, 식민지 피해를 구체화하는데 사용되는 동시에, 비제도적 비공식적 기억에서는 식민지 피해라는 역사성이 소거되고, 남성의 성의 대상으로 향유되는 존재로 그려짐.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위안부'의 존재는 공적기억에서는 식민지 피해의 구체화된 표상으로 인식되고, 대중의 인식에서는 '성'의 문제가 포함된 문제로 은폐되고 터부시되며 침묵하게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는 일본제국이 사회적 인식 속에서는 신민의 신분을 얻지 못했던 일본의 주업여성들에게, “황군을 위안하는 신민”이라고 '애국'을 '위안부'로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과 같은 구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한국은 국가적으로는 '민족의 수난'이라는 자격을 주어 남성과 같이 호출하지만, 여성의 피해라는 측면에서는 개별화하고 은폐.

3. 성의 소거와 민족의 수난자로의 '위안부'

- 1991년 피해자 김학순이 할머니의 모습, 즉 더 이상 젊은 여성의 성이 아닌, 성이 소거된 피해자의 모습으로 증언자로 나타나 일본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임.
- '위안부'의 문제가 성과 연결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로 부상했고, 성과 연관시키는 "매춘"의 표현 방식은 역사적 사실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로.
-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2004년 여배우 이승연이 위안부를 제재로 제작하려 했던 사진집 사건에서 충격적으로 드러남. 이 여배우는 위안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름다운 여체를 강조해,한국사회에서 공분을 일으킴.
- 위안부 피해자와 단체들은 “우리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상업주의에 분노한다,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누드제작을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승연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모든 프로그램 등에서 하차
- 이와 같이 대중 속에 할머니 모습의 피해자들의 등장은 한국사회에서 터부시 하는 성의 문제를 소거하고, 해방이후 연속되어 온 공공의 역사의 표상, 즉 민족의 수난과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안부의 문제는 한국의 공공역사와 대중인식 속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항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해갔다고 볼 수 있음



독립운동 언설과의 연동



4. 일본이 부정하고 있는 것 : 기억의 역사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불법성'

- 1993년 8월 4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일본 내각관방 내각외정 심의실 발표

- (1) 위안소 설치 경위 : 위안소 개설은 군당국의 요청
- (2) 위안소가 설치된 시기 : 1932년 상해사변 발발 시 위안소 설치 자료 존재. 그 이후에 확산
- (3) 위안소 존재했던 지역 :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미얀마, 뉴기니아, 홍콩, 마카오 및 불영 인도네시아.
- (4) 위안소의 총수 : 자료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
- (5) 위안부의 출신지 : 일본, 조선반도,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 일본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 출신자가 많음.
- (6) 위안소의 경영 및 관리 : 구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다.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도 일본군이 개설 허가, 위안소 시설경비, 위안소 규정 등 구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직접 관여.
- (7) 위안부의 모집 : 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가 담당. 업자가 감언 등 본인 의함에 반해 모집한 케이스가 많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케이스도 보인다.
- (8) 위안소 수송: 일본군이 특별하게 군속에 준한 취급으로 도항신청을 허가, 일본정부는 신분증명서 등 발급, 군의 선박과 차량 이용, 패배 후 귀환시키지 않은 경우도 많음.

매춘부/소녀/강제연행

- 제국의 연속으로의 인식, 식민지문제 불인정

1.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사료적 용어
특수부녀,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 취업부녀, 창기, 작부, 여급, 종업부, 요원 (타이완)
2. “16세부터 30세까지, 전차금 500원부터 1000원까지, 취업기간은 2년, 소개수수료는 전차금의 1할을 군부에 있어서 지급”(上海派遣軍內陸軍慰安所における酌婦募集に関する件,1938.1.19)
3. 내무성 경보국장의 통첩
“21세 이상 이미 매춘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의 승낙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내무성발경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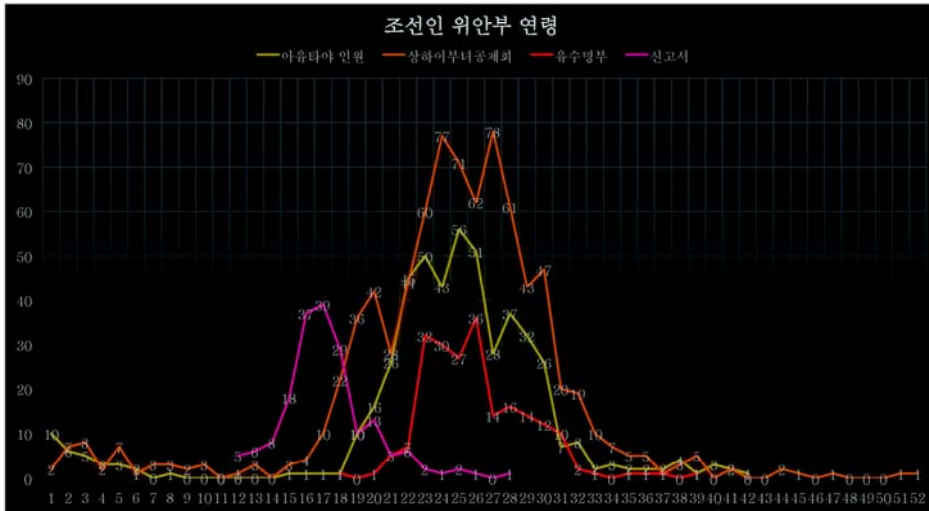
- 일본의 '와카야마 사건'과 조선인 피해자 김덕진의 강제동원

- [皇軍將兵慰安婦女渡来ニツキ便宜供与方依頼ノ件](昭和12年12月21日)
- 이 문건은 和歌山県知事發内務省警保局長宛「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ニ関スル件」(1938年2月7日付)에 첨부되어 있던 문건으로 위의 문건에서는 조선과 일본에서 위안부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었음.
- 이 때, 위의 문건대로 강제동원하려다가 일본의 와카야마 경찰이 황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군당국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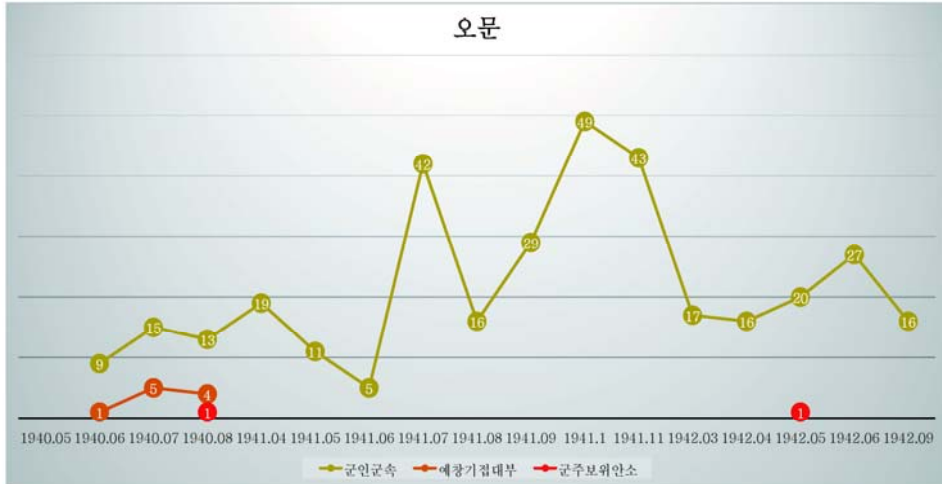
→ 조선에서는 군, 면, 도에서 문의 없이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김덕진('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들' 3권)의 증언에서 잘 알 수 있음

일본본토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 등에 의해 보고되고 제도가 개선됨(내무성 통첩)

조선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개선 이루어지지 않음



또하나의 사실 : 위안부와 군 동원 형태/ 337명 당 10명, 2년



5. 다큐멘터리 「주전장」이 말하는 것

- 일본의 '레이시즘'의 문제?
- 박유하 교수와 이나영 교수의 등장의 의미의 차 인식하지 못함
- 한국 일본 운동의 '비지성'의 공통성
- 같은 시기 한국에서 만든 것은 '김복동' : 피해자의 개별화/위인화

6. 영화 ‘근함도’의 결말이 의미하는 것

- 식민지 문제의 해결에 대한 혼란함, 착종
- 강제동원 노동자, 위안부, 친일자, 독립운동가, 밀정 등 식민지기에 존재했던 모든 형태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들에 대한 결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파괴
- 위안부 피해자(성인여성)과 소녀 : 위안부는 사망하고 구해지는 것은 소녀



7. 평화의 소녀/항일의 소녀

-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인식되는 전시여성 폭력,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은 구호로 존재하지만, 공공기억, 공공역사로 자리매김해 가는 방식은 성적요소가 배제된 ‘민족의 수난’으로 수렴되어 왔음.
- 일본군 ‘위안부’의 표상의 방식은 일본이 부정하고 있는 ‘기억의 사실’을 현재화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해방’이며, 그 해방을 얻기까지의 운동은 ‘독립’ 운동과 같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녀상’은 한국 속의 공공기억, 공공역사가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운동’하기에 너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기억장치.
- 따라서 이 소녀상은 평화를 상징하고자 하지만, 이해되는 방식은 ‘항일’일 수 밖에 없음

- 공공기억의 무의식적 연동 : 반일, 항일, 민족의 수난자



유관순 국가표준영정, 2007



평화의 소녀상

결론 :평화를 만드는 방법

- 식민지 문제에 대한 보다 천착된 고찰
- 대립구도의 재정비 일본:한국 - 일본제국주의자 : 피지배자의 문제
- 일본군'위안부'문제 속의 우리 안의 '역사적 정념(情念)'이해
- 피해자의 발견과 인권의식 고양의 긍정적 측면 강조
- '평화'를 이야기하는 주체의 고찰
 - 일본의 평화는 피해의 강조로 표현
 - 갈등의 해소의 과정으로서의 '평화'
 - 피해자의 주체적 행위, '용서'의 학문적 가능성

토론

길윤형 (한겨레신문)

1.

양미강 선생님의 지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국 사회 내엔 ‘엄청난 간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 선생님은 이런 간극 가운데 하나로 ‘원칙적 이상주의’와 ‘정치적 현실 사이의 간극’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2015년 12월 나온 12·28 합의 이후 한국 사회에선 이 둘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간 역사갈등을 바라볼 땐 이 문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균형을 잡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을 바로잡는다는 정의로운 ‘인권 문제’이었지만, 동시에 한-일 당국이 교섭과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는 ‘외교 현안’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엔 양보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양보 없는 원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가 되는 순간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외교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에 우리가 원하는 100%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외교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는 합의는 상대국 내부의 반발을 불러와 합의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 시절과 집권 초기엔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그러나 집권 2년차인 2018년 이후로는 ‘외교 현안’으로 다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12월3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12·28 합의에 대해 “이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 <한겨레>의 대선후보 설문조사에서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두달만인 2017년 7월31일 외교부는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만듭니다. 그로부터 다섯달 뒤인 12월27일 나온 태스크포스의 결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이며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한 합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튿날인 28일 이 보고서 결과를 받아들여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급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

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해를 넘긴 2018년 1월9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는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①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②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③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이후 정부가 12·28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 외에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운동 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정의연이 주장했던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2.

그런 가운데 문제인 정부의 12·28 합의 ‘무력화 조치’ 그리고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는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원칙적 이상주의’는 ‘정치적 현실’을 뒤늦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에까지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노한 일본이 2018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 훼방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월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읽어 보면, 일본이 북-미 핵 협상에 얼마나 ‘방해적 역할’을 했는지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볼턴 보좌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018년 5월4일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생물학·화학 무기, 나아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해체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듬해 2·28 ‘하노이의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의 핵심 내용이 이날 미-일 사이에 합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며,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적극 포섭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라 할

수 없겠지만, 결국 일본의 집요한 방해 등으로 인해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내년 1월 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집권에 발맞춰 2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일 관계를 회복해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과 같은 ‘평화 올림픽’으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구상의 기본 인식은 일본을 더 이상 패싱하지 말고, 적극 포섭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학계와 시민운동 쪽에서도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소장은 지난 11월6일 열린 리영희 선생 10주년 추모 심포지엄에서 “동아시아 평화구축이라는 더 큰 경지에서 일본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을 상대할 때 ‘민중적 현실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중요 원칙이지만 그것을 100% 일본에게 요구한다면 역사 문제에서도 실패하고 평화구축에서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적 시동을 걸기 전에 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를 개선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오늘 참석하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도 “일본에도 민중이 살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을 공유한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하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넘어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아직까지 냉담하기만 합니다. 일본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한국의 여러 외교적 노력에 대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등에 의해 매우 엄혹한 상황에 있는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계기를 한국 쪽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의 ‘원칙적 이상주의’가 일본의 태도를 이렇게 경직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한번쯤 자문해 봐야 합니다.

3.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본과 역사 문제를 논할 때 ‘원칙적 이상주의’를 고집하는 것이 꼭 옳은 태도인가 이제 그만 자문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본과 역사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유리한대로 이해하며 ‘정신 승리’를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뤄진 여러 일들 가운데 ‘독특한 역사 수정주의’를 내세워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어찌지 못한 ‘기본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고노 담화와 12·28 합의의 앞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군 내각 총리대신으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역사 속에서 지우려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희망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고노 담화의 무력화를 위해 검증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4년 6월20일 발표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공방의 경위’란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고노 담화에 대해 ‘털끝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고노 담화가 최악의 역사 수정주의자라 평가 받는 아베 총리조차 건드리지 못한 인류 모두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적 유산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12·28 합의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가장 큰 초점이 된 것은 ①‘소녀상 철거’와 ②“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상 철거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역시 최근 독일 미테구 소녀상을 둘러싼 공방에서 드러나듯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가 자신의 입으로 위안부 문제가 “국가 범죄”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까지 담보로 걸면서 추구해야 할 지상 최고의 가치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태호 소장이 말한 ‘민중적 현실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할머니는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입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결국 그 나라 주인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알아야 뭐 때문에 사죄 배상한다 거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 한국 학생들이 왕래하면서도 세월이 가면서도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왕래하면서 친해지면서 서로 배워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학생들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 학생들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를 공부해서 위안부 문제 사죄 배상하는 것을 했다. 이 사

람들이 꼭 역사의 주인이니까 일본 올바른 역사 교육시켜서 이 억울하고 누명 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해결해 줄 사람들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대일 강경투쟁’에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전승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운동 방침의 전환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할머니의 이 마지막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김소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올해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이하 '2000년 법정')이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8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VAWW-NET(전쟁과 여성 인권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가 제안하여 그 개최가 결정된 '2000년 법정'은, 2000년 12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2000년 법정'은 심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인정하고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한 10명에게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국제법 위반 사실의 인정 및 사과와 배상,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와 자료 공개, 기념관 등의 설립과 교육, 책임자 처벌 등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비록 비록 민간법정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으나 국제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 문제를 법정에 올리고, 전시하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단죄할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2000년 법정'의 의의와 성과는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2015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기념물, 영화, 드라마, 소설과 같은 매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리려는 실천도 늘어났다. 2011년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의 상징이 되어 국내외 곳곳에 세워지고 있고, <귀향>, <눈길>, <아이 캔 스피크>, <허스토리> 등의 영화와 드라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에 대한 공감과 상상의 가능성을 넓히며 대중적 공인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 과정 중에 접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용은 짧고 단순한 경우가 많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에도 불구하고 이와 함께 '위안부' 제도의 전반적인 모습과 피해 실태의 파악을 도와줄 콘텐츠는 부족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해도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파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쉬운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제의 식민지배 하에서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

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 외에는 ‘모르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동시에 이를 전시하 여성폭력 문제로 현재화하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 교육을 통한 이 문제의 기억과 계승이다.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가 정의기억연대와 일본군 ‘위안부’ 운동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둘러싼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 제기와 운동의 존폐로 단순화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위안부’ 운동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 및 배상과 함께 전쟁이 파괴하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는 역사적 기억을 잊지 않고 전승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가운데 우리는 첫째,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당시 식민지 조선이 처했던 상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운용되었던 상황과 피해가 발생한 맥락을 이해하고, 둘째, 이것이 일본의 외면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문제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2000년 법정’ 이후, 이를 평가했던 이들은 조선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모집, 동원된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식민지 지배’라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하 여성 폭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아시아 피해국 각국이 처했던 식민지, 점령지, 교전지라는 각기 다른 상황이 섬세하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히라이 미쓰코가 지적했듯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교육도 쉽지 않다. ‘위안부’ 제도가 탄생하고 운용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때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군과 ‘위안부’ 피해자라는 2자적 관계를 넘어,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집중되었던 시야를 공창제와 식민지 조선의 하층 계급 여성의 삶 등 전쟁 당시의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당시의 시간적 맥락과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현재’의 ‘나’와 연결된 문제로 연결지을 수 있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웹진 <결>의 독자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웹진 <결>에서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점으로 피해자의 말과 삶을 구체적으로 전함으로써 이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평범한 시민’임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들었다. 그리고 대중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대응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이를 ‘나’의 문제로 연결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역시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많은 이들이 흥미로운 콘텐츠로 꼽았던 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 1, 2”,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며 변화한 이들의 삶을 기록한 “돌이킬 수 없는 변신과 점거의 자리”(장수희)와 “2주 간의 소녀상 관찰기”(어효은), 컴필레이션 앨범 <이야기해주세요 - 세 번째 노래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음악으로 풀어낸 뮤지션들을 인터뷰한 “‘위안부’ 문제를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1, 2”, 나눔의 집에 기거한 피해자들의 삶에 방을 통해 접근한 “할머니의 방”(김대월) 등이었다. 이는 모두 생존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대해 다루면서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글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취업을 시켜준다거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기를 통해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하고 이 과정에 일본군과 업자 등이 개입하여 운영된 ‘위안부’ 제도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매매가 존재하는 현재의 한국 사회와 연결된 문제로, 성폭력 경험을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닌 수치스러운 과거로 인식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억압된 과거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이들의 말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와 연결된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의미는 식민주의, 여성 인권, 평화가 갖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민감성을 높이는 데 있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 ‘위안부’ 문제를 기억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를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껏 피해자들의 말을 어떤 태도로 들어왔는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때 기억의 역할을 무엇인가 등을 다시 물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이때 공공의 역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공감하고 분노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위안소 운영이 가능했던 구조와 이의 해결을 가로막아온 인식을 사회적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토론

김정인 (춘천교대)

16분의 생존자가 남았다. 지금 현재 생존자의 삶을 돌보는 일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생존자가 0명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 대비할 적기이기도 하다. 생존자가 살아있는 역사에서 그것이 곧 ‘과거’라는 상자 속에 갇히는 날이 곧 올 것에 대비해야 하는 때인 것이다.

이념 갈등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성불가침한 ‘성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누구나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보편 기억이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희화화하고 폄훼하는 역사 부정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폄훼한 교수를 향한 국민적 공분을 보면 그것이 갖고있는 보편 기억으로서의 힘은 다른 과거사들에 비해 강력하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전시성폭력이라는 보편 기억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다. 한국 여성운동이 촉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보편기억화는 세계 여성 인권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보편기억화, 성역화가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의연 사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역화가 가져온 안이한 대처가 문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광범한 시민적 지지기반을 발판삼아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한일외교의 부담감을 안고 가야 하는 정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주의적 편향성을 강하게 보였다.

본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대를 아우르고 이념을 뛰어넘어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민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것을 일본에 원칙적인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역사문제로 국한시키면서 이제는 정부가 오롯이 해결 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쟁점화 되었을 뿐, 대중화되지 못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민운동으로서의 확산 방안을 더욱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의연을 비롯해 지난 30여년간 시민운동 차원에서, 세계시민운동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면, 현재는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행사를 찾아보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민운동으로서의 상징인 수요 집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날이 곧 올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어야 보편기억으로서의 운동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토론

최이락 (연합뉴스)

오늘 국제 학술회의는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기억하고 교육할 것인가 등 세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현재와 미래라는 회의 주제에 맞는 구성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급확산의 영향으로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1, 2 세션을 직접 방청하기가 어려웠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국내 학자와 활동가, 언론인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의 틀과 폭을 대폭 늘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획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와 연구자들, 그리고 당연한 목소리이지만 일본에 대한 진정한,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글로벌 이슈화를 끌어내는데 일정 부분 공헌한 활동가, 이런 활동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연구와 활동에 힘을 실어준 언론인들의 공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 부분의 학술회의나 세미나가 이런 그룹들 구성원들의 주도로, 해당 구성원들이 주로 참여하면서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우리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외부관점)에 머무른 면이 있다는 점도 완전히 부인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위안부'라는 주제의 특성상 외부의 비판이 사실상 봉쇄돼 왔고, 즉 어느 정도 신성 불가침 영역이 돼 왔던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위안부 운동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해도 곧바로 '친일', '적폐'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윤미향 사태나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문제가 올해 들어 파문을 일으키며 이런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일본 강점기 일제의 만행이고, 또 보편적 인권에 반한 폭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이번 학술회의도 이런 점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것은 올해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전기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한다.

지난 8월 부산에 사시던 이막달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자는 16명으로 줄었다.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 시면서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는 '역사' 속의 위안부(이런 표현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이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해 보인다. 다만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 문제를 지나치게 성역화하는 일, 그리고 '우리들만의 리그'로 다루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배타적 접근은 국제사회의 대일(對日) 여론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비판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구호를 반복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강제 동원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후세에 대한 교육도 이런 고증된 자료들을 근거로 담담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요구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일에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도 내려질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토론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위안부 운동은 30년 동안 끊임없이 확대 발전하며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30년이 지난 2020년의 시점에서, 현실을 얼마나 바꾸어놓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책임 이행에 입각한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아직 미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대일 교섭을 담당할 정부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해결을 목표로 운동을 전개해 온 측에서도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진지한 성찰 위에 운동과 정치의 대화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래 운동 측이 주장해 왔고, 이 정부가 수용한 피해자 중심 접근의 원칙이기도 하다.

운동은 의도를 따지지만, 정치는 결과를 따진다. 운동과 정치는 긴장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관계를 끊는 순간, 운동은 교조주의로, 정치는 형식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좋다’는 사실만으로 ‘옳다’고 믿는 태도(홉하우스, E. H. 카의 20년의 위기에서 재인용)도, ‘있다’는 사실만으로 ‘옳다’고 믿는 태도도 이상이 현실로 내려오는 사다리에 장애물이다.

특히 운동 측에서는, 이상을 실현하여 현실에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공학에 관심을 갖는 ‘민중적 현실주의’¹⁾가 필요하다. 이에 무관심할 때, 정치공학은 현상을 유지하여 변역을 거부하는 ‘반동적 현실주의’의 전유물이 된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열기는 사라지고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자의 목소리가 횡행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2000년 법정 운동은 이후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끌어 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정부의 대일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가 2015년 합의였다는 점에서 운동은 그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15년 합의 이후 운동이 더 커진 측면은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운동 측보다는 반동 측에 유리한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그 파기나 재협상도 오히려 반동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며, 기 이후의 운동에 확실한 전망도 서 있지 않는다는 점을 ‘정직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15년 합의를 전취(戰取)하여 전유(專有, appropriation)하는 것이 선택지의 하나로 존재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합의를 공학적으로 해부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합의를 공학적으로 분해하고, 그 내용과 구조를 다시 이해해 보고자 한다.²⁾ 먼저 2015년 합의의 이행에서 한국의 이행은 일본의 이행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1) 리영희 서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2020.11.6.)의 토론에서 이태호가 제기한 개념.

확인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은 일본군 관여 사실을 인정한 위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한 데 따른 것이며, 일본 정부의 금전적 조치는 이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합의 직후,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이 합의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2015년 합의’가 ‘사문화’되고 있는 일차적 원인이다.

‘2015년 합의’는 현재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2015년 합의 검증 TF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현, 예산조치의 실시 등 ‘3대 핵심사항’에서 진전이 있으나, 소녀상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등 세 가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발표하는 가운데 검증 TF 위원장은 향후 파기 무효화, 합의 유지, 제3의 방안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이성의 비판에도, 의지의 낙관을 믿으며’, “문제가 있고 치열한 해결 노력이 있으면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제3의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통령도 입장 표명(12.28.)을 통해 2015년 합의가 절차적 내용적 흠결이 확인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었으며,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외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피해자 중심해결과 국민이 함께 하는 외교 원칙 하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교부는 후속조치를 발표(2018. 1.9.)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조치를 모색하고, 10억 엔 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기금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재단 운영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발표하면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위안부 문제와 같이 전시 여성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우려와 의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미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2018.1.16.)를 통해, “국가간 정부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약속 파기나 재협상 추가 요구는 없다”면서, 문제 해결에서 확인되어야 할 세 가지 기준으로 “역사적 진실, 보편적 정의, 피해자 입장” 등을 제시했다.

2019년 12월 27일에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평가가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도 참고할 사항이다.

이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국가간 정부간 합의’로 존재하며, ‘파

2) 이하, 지난 11월 14일, 정대협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12월 5일,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편집한 것임.

기나 재협상의 추가 요구'는 하지 않으나, '역사적 진실, 보편적 정의,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여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인식도, 이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의 원칙이 확인되도록 개정(revise)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

합의로서 존재하지만, 미완의 해결이라는 것은 이 합의가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원칙을 확인하는 로드맵에 대한 합의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비록 그 안에 구체적 해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그 법적 효력에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외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미일관계에서 존재한다.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의 문제가 가장 유사한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클린턴 국무장관(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2014년 4월), 트럼프 행정부 시기 Tillerson 국무장관(2017년 2월), Mattis 국방장관(2017년 2월 및 10월), 트럼프 대통령(2017년 2월)이 언급해 왔으며, 기자회견 자리에서 표명되어 왔다. 이를 일본에서는 미국의 '방위 의무'의 공언으로 해석해 오고 있으나, 그 법적 효력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그 의지를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당선인과 스가 총리와의 첫 전화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구두'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다. 여기에서 합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구두 약속'의 반복이 필요한 것이다. 즉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문서로서 그 효력이 확인될 것을 전망한 '구두합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는 일본의 행동은 그 법적 효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후텐마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미일 합의, '북방영토' 등의 해법을 포함한 1956년 러일공동선언 등이 그 사례이다.

합의의 일본 발표 내용 가운데 중심은,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거출하고, 일본과 한국 양국이 협력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의 사업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10억엔 거출과 전달로 일본의 책임 이행이 완료된 것이 아닌 것이다. 즉 2015년 합의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

3)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33876.html ;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ents/JPN/CEDAW_C_JPN_CO-7-8_21666_E.pdf

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합의 내용에 입각해 일본 정부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문화’된 합의의 ‘소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즉 일본 정부의 이행 의무가 10억 엔을 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 사업의 실시에 있다는 점이 합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분명히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10억엔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그 사용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억엔의 의미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예산 조치가 일본 정부의 가해 사실 및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일 때, 피해자들은 이를 수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행동’은 ‘진실 인정, 진심을 다한 사죄, 재발 방지 노력’이다. 그런데 이는 ‘추가조치’가 아니라 ‘필요조치’로서, 합의의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장의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5년 협정이 해결될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과 되어 있는 것과 대비해, 2015합의는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고 되어 있다. 이는 2015합의가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5합의는 로드맵의 의미를 지닌다. 즉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언젠가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실시할 조치란,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10억엔의 전달 만으로 일본이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해결될’의 주어가 ‘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기시다 외상이 밝힌 제1항에서 언급한 ‘위안부 문제’이며, 이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에는 소녀상의 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체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 두 문제는 2015합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1밀리미터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은 합의에 대한 몰이해(또는 자의적 해석)에 더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몰이해가 확인되는 말이며, 이것이 만일 일본이 취해야 할 ‘필요조치’에 대한 거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합의 위반이다. 반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합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 또한 합의에 대한 자의적 해석(또는 과잉해석)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참고할 것은, 2018년 1월 9일,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추가 조치’ 수용 거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일본의 합의 이행은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도 이행할 것이며, 한국 측에게도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는 사실이다. ‘추가 조치’가 아닌, ‘필요 조치’는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이 ‘필요조

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최종적으로 사문화될 것이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 무엇보다도, 합의에서 확인된 일본의 가해 사실 인정과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법적 책임의 완수만이 사문화된 합의를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공은 일본에 있다'.

일본의 책임있는 사람(스가 총리, 또는 도미타 대사)이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하여, 고노담화에서 확인한 바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2015년 합의에 입각해 일본 총리대신의 사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베 내각에 이어, 2015년 합의를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계승한다는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 즉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과한다는 문구를 스가 총리의 육성으로 확인해야 한다. 2015년 합의는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주어로 되어 있어, 개인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 즉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한 주체는 아베 총리인 바, 그가 사인으로서 이를 표명한 데 불과한 것인지, 공인의 입장에서 사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주어에 이어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라는 자격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에서의 해석과 판단도 이 표현에는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총리들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거나 다마구시로 등을 봉납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 공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중의원에 제출된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사인'으로서의 '공식 참배'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⁴⁾ 그렇다면, 2015년 합의는 우리 측이 그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베는 사인으로서의 의견을 표명한 데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 2015년 합의가 한일 정부간의 합의로서 법적 효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15년 합의에서 확인한 10억엔은, 고노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대로 일본군에 의한 전시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마음의 징표로서 일본의 예산 조치로 거출'하여 전달하는 '사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10억엔이 합의에서 확인한 대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피해자 없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10억엔의 잔여금과 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 설립 요구를 반영하여, '진상규명과 연구교육, 기억계승'을 위한 시설을 라키비움의 형태로 설립하여, 국제사

4)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88008.htm ;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88008.htm

회와 미래로 열린 해결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상의 일본 측 노력을 전제로, 2015년 합의가 보완되어 그 한계가 극복되었음이 확인될 때, '평화의 소녀상'은 위에 언급한 라키비움 형태의 시설/기구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수요집회의 상징이었다는 점이 계승된다. 이후 수요집회는 위의 시설/기구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수요행사(이용수 학교, 세미나, 간담회, 증언 낭독회 등)로 전환되어 실시될 수 있다.

이 시설/기구는 일본의 연구자, 활동가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재단을 국제사회에 '전시 성폭력'의 '기억계승'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 전시 성폭력과 관련한 아시아의 여성 관련 국제레짐을 주도하는 기구로 발전시킨다.